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17 이후 이 땅의 민중은 계속되는 폭압통치에 질식할 상황에 놓여 있다.

모든 민주세력은 구속, 구금, 폭행에 시달리며 국민들도 또한 현 군사독재정권의 매판적 경제정책의 결과로 민생이 파탄에 직면해 있다. 500억불을 넘어선 외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채 부의 편중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철희·장영자 사건, 명성사건, 영동사건, 정래혁 사건 등의 초대형 권력형 부정부패사건들은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 군부독재권력은 자신들의 폭력과 실정,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적 지지를 상실하자 외세에 의존하여 권력의 유지를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민주적 폭압정치가 계속되는 한, 반민중적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반민중적인 대외종속이 심화되는 한, 광주는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안다. 오늘날 모든 민주, 민권, 통일을 향한 투쟁의 현장에서 광주는 숨쉬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민중을 짓밟는 독재권력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결의와 함성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2.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의 지원에 대하여 한국민에 사죄하라.
3.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의 생존권을 사수하자.

(29개단체 공동성명서에서)

■ 중앙위원회

의 장 : 김근태  
부 의 장 : 한경남  
부 의 장 : 최민화

■ 홍보위원회

위 원 장 : 한경남

■ 인권위원회

위 원 장 : 최 열

■ 지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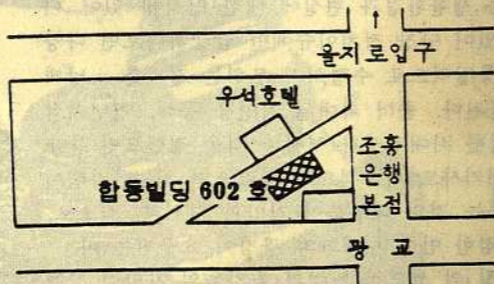
강우철, 계훈제, 고영근, 고 은, 김병걸, 김승균, 김승훈, 김중철, 김태홍, 김택암, 문익환, 문정현, 박종태, 백기완, 성내운, 송기원, 송기인, 신경림, 양 흥, 여익구, 예춘호, 오태순, 윤반웅, 이경일, 이부영, 이우정, 이재오, 임채정, 장기표, 함세웅, 호인수, 황상근

■ 운영위원회

위 원 장 : 김희택  
사 무 국 장 : 천영초  
집 행 국 장 : 이범영  
대 변 인 : 김희상  
총 무 : 천영초  
교육선전부장 : 서원기  
사 회 부 장 : 권형택  
청 년 부 장 : 이범영  
여 성 부 장 : 임태숙

■ 상임위원회

위 원 장 : 김병곤  
부 위 원 장 : 연성수



서울 중구 삼각동31-3 합동빌딩602호  
TEL : 730 - 9452

# 제9호

# 민주화의 길

발행인·김근태 / 편집인·한경남 / 발행일자 1985. 5. 13 / 발행처 : 민주화운동청년 연합 (730-9452)



군부통치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광주시민들

위기적 상황에서 70만 광주를 멋지게 운영한  
민중의 민주역량이야 말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 광주여, 민중항쟁의 드높은 봉우리어!

다시, 광주민중항쟁의 다섯 돌을 맞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도처에는 매관·군부독점세력을 한편으로 하는 <소수>와 기층민중 및 민주·민중 세력을 또 한편으로 하는 <다수>가 전선을 형성한채 5월의 그날과 똑같은 과제를 놓고 투쟁하고 있다.

광주학살 사죄, 책임자 처단, 사상자의 피해 보상, 생존권의 보장, 민주정부수립 등은 그날의 함성이지만 오늘의 절실한 주장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제는 광주민중의 요구를 압살하고 민중을 학살하는데 동의·지원한 미국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며 「부산 미문화원사건」 관련자의 전원 즉각 석방도 요구하고 있다.

5월 항쟁은 지금도 명백히 계속되고 있다. 아니,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민중의 민주화 의지와 화산처럼 폭발한 장엄한 투쟁이 타민족의 침입처럼 참혹하게 짓밟힌 이래, 민중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피어나는 깊은 상처는 5월의 좌절과 뒤엎겨 민중의 한(恨)으로 봉우리져 우뚝 솟아 감오농민혁명에서 3·1항일민족해방운동과 4·19 민주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거봉들과 나란히 반외세·반군사독재민중투쟁의 산맥을 이루고 넘어가라 손짓하고 있다.

## I. 전두환 정권은 역사의 반동 위에 핀 악의 꽃이다.

생각건대 70년대 말의 유신체제는 이미 매관·군부독점 세력과 기층 민중·민주·민중 세력간에 벌어진 심각한 대립과 화해할 수 없는 모순투쟁으로 말미암아 말기적 증상을 앓고 있었고, YH사건이나 신민당총재제명처분과 같은 비이성적 대응 속에 부마항쟁으로 위기를 맞았다.

10·26 사건은 위기를 맞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대처방안을 놓고 강·온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지배세력의 자기분열증이었다. 질식상태의 유신체제를 겪고난 민중의 민주화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주·민중 세력은 즉각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며 과도정부에 대해 유신잔재청산, 거국과도정부수립을 촉구했고, 오랜 동안 허리띠를 졸라며 굴종을 강요당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의 퇴진을 요구하며 생존권확보투쟁에 나서는 등 민주화는 정녕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였다.

그러나 최귀하 과도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반민주적 음모를 획책했다.

12·12 쿠데타는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한 군부 강경파와 유신잔당이 정승화 온건파를 제거하고 지배체제의 정점을 재편한 뒤 그 음모를 표출시킨 민주화에 대한 정면도전장이었다.

전두환 정치군부세력의 반민주적 획책이 노골화하자, 시민·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수십만의 가두 시위로 발전해갔다.

마침내 위협을 느낀 전두환 일파는 5월 17일 전국에 계엄을 선포한 뒤 민중적 열망을 압살해 버렸다.

5·18에서 5·27에 이르는 10일간의 장렬한 민주화 투쟁은 바로 그같은 역사적 반동에 광주민중이 온몸으로 항거하면서 민중의 민주화 의지를 집약적으로 표출시킨 민주 깃발의 찬란한 계양식이자, 처참한 강하식이었다. 제 5공화국은 한낱 민중의 학살 위에 핀 추악한 권력일 뿐이다.

## II. 광주민중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승승이다.

광주 민중이 보여준 10일간의 항쟁은 민주화투쟁의 도정에 여러가지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㉞ 민중은 잠들지 않으며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가깝게는 부·마항쟁 이후 일련의 투쟁에서, 특별히 광주민중항쟁의 생생한 경험에서 보듯, 민중은 생동하는 실체이고 폭발하면 죽음도 두려워 않고 폭압을 견어치는 무한한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중의 이 잠재력은 2·12총선에서 또다시 경험했듯이 즉흥적 돌풍은 아니었다.

그것은 식민시대에서 출발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거쳐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긴 억압사에서 볼 때 외세와 그들의 국내 악수세력들의 등쌀에 한번도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굴종과 희생과 기만에 시달려온 민중이 구체적 계기와 마주칠 때마다 주저없이 일어나 분출시킨 응축된 분노였으며, 일시적이거나 광주를 자

유케 했던 역동적 힘이기도 하다.

바로 그 때문에 광주민중항쟁은 편협한 지역감정의 발로인 '광주민중'의 항쟁이 아니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인 것이다.

민중은 언제나 깨어 생동하는 존재이며, 때때로 괴력의 '헐크'로 변신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투쟁의 미래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세력은 이 산 교훈을 되새겨 민중의 역량이나 정치의식을 관념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범하는 잘못을 되돌이치지 않도록 그들과의 접촉면을 증대시켜 가는 일이 중요하다.

### ㉟ 광주민중항쟁은 앞으로의 민주화운동이 반외세·반독재·민중투쟁이어야 함을 제시했다.

야만적 탄압에 피로 항거한 수십만 민중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매관·군부 독점세력을 반대하고 민주화를 염원했나를 알 수 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종업원, 실업자, 학생, 민주인사 등 기층민중과 민주·민중세력이 무차별 사살에도 굴하지 않고 계엄철폐, 전두환 처벌, 생존권·확보, 민주정부수립을 외치며 최후까지 항쟁한 것은 군사독재체제의 희생자가 누구였나를 시사해 준다.

또 인권의교를 내걸고 제 3세계에 어필하던 카터정부가 민중투쟁을 보고 놀란 나머지 한국의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유보하고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토록 미국의 통제 하에 있던 4개 대대의 한국군을 풀어 학살을 동의·지원한 처사는 미국이야말로 친미적이기만 하면 어떤 독재정권이라도 지원하고 제 3세계 민중의 생존권이야 어떻든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이기적인 국가임을 드러냈다.

이것은 군부독재권력이 외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그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므로,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참 민주화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실감나게 확신시켜 준 증거였다.

그러므로 광주민중항쟁은 ① 참된 민주주의의 수립과 ② 외압으로부터의 자결권 확보를 통해 ③ 민중의 구체적 삶을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민중을 자유케 함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중은 반외세·반군사독재 투쟁을 통해 민중·민주·민중이란 세 내용이 총체적·통일적 인식 하에 구체화되길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㊱ 가두시위는 민주·민중운동세력과 민중의 만남이며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두란 대중 속(거리)에서 독재정권과 민주·민중세력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몸싸움이기 때문에 권력의 본색이 드러나며, 민주·민중세력은 자신의 요구를 대중에 선전하여 지지와 동조를 획득할 수 있는 선전장이 된다.

대개의 경우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대중에게 자신감을 보이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중은 공포감을 극복하고 시위에 동참하여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광주항쟁에서도 이 역동성이 보였다. 시위대가 전 시가지로 대규모 확산되자, 치안력의 분산이 저지력의 약화를 가져오면서 ① 먼저 현장저지 체제의 붕괴를 보였고 ② 이에 현장진압능력이 없어진 계엄군이 도시 주요 거점과 중핵만을 방어하는 중요지점 방어체제로 전환치 않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목도했다. ③ 이때 도시의 약한 고리인 도시 외곽과 중간거점을 시위대가 차지하면서 한편엔 도시 → 농촌의 연결로 투쟁경험의 농촌 확산이 이루어졌고, 다른편에선 방어수단의 획득이 가능해짐을 보였다. ④ 또 방어력이 세고된 뒤부터 자신감을 얻은 시위대는 도시중심부로 집중하여 광주를 탄압으로부터 구해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시위의 전지역화·규모화 → 현장저지 체제의 붕괴 → 중요지점방어체제의 붕괴 과정을 보인 것으로 이를 역동적으로 보면 시위대의 양적 증가 → 현장저지 체제의 붕괴와 도시의 약한 고리 차지 → 투쟁의 질적 발전 (방어력 제고와 광주의 자유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민중과의 접촉방식에 여러 유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세력은 이 만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동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㊲ 민주화는 한장의 글과 한마디 말로 되지 않고 단호한 결의와 결연한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광주 항쟁은 또 소수의 매관·군부독점세력이 민중의 요구를 '적대적'으로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실현구조를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잔인성을 보여 주었다.

위협을 느낀 전두환 친위 세력은 평화적인 시위를 추적, 학살했으며 또 예방진압을 목적으로 집집마다 뒤지며 청년을 붙잡아 무차별 구타·연행·학살했고 심지어 여학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까지 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광주를 공포와 죽음의 도시로 만들어 민중을 침묵과 굴종의 억압구조에 가두려 했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은 공포로부터 광주를 구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일어나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들은 계엄군의 무차별·조준사격에 자신들의 버스·택시·트럭까지 동원하며 맞서다 어느사이엔가 그 한계를 느끼자, 저절로 방어수단을 든 '시민군'으로 바뀌어버렸다.

광주가 자유도시로 변한 후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이 임박했을 때도 그들은 군의 철퇴, 전 시민 무장화, 전원 자폭을 결의하며 기동타격대를 조직했고 또다른 200여명의 노동자, 종업원, 실업자, 학생 등은 최후항쟁을 위해 재무장했다.

이들 최후항쟁집단은 정예 계엄군과 무려 10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일부는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체포된 일부는 고문과 구속을 받아들여야 했다.

광주 재진입 완료 후 계엄군은 전시가지를 돌며 투쟁성의 여지를 쓸어버리는 작업을 단행했다.

민주화투쟁이란 투쟁의 정당성이 확보 되었다고, 한마디의 정곡을 찌르는 연설이나, 한장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뒤에는 여전히 물리적인 힘의 울타리가 버티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청되는 것은 단호한 결의와 결연한 자기 헌신 뿐이다.

㉞ 위기적 상황에서 70만 광주를 멋지게 운영한 민중의 민주역량이야말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광주가 자유롭게 된 5월22일부터 함락된 5월27일까지 닷새동안 외부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광주민중이 보여준 자치능력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시민군'은 외곽에서 광주를 봉쇄하고 있는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광주의 자유를 지켰다.

명망있는 목사, 신부, 유지, 정치가, 학생 대표들은 스스로 도청에 모여 수습위를 구성하고 일반수습위는 대(對) 군 협상과 대민중 설득을, 학생수습위는 치안대를 조직하고 총기회수와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또 도시가 자유화된 날부터 매일 한번씩 열린 민주수호국민대회는 수습위원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공지 사실을 접수했으며, 수습위원회의 협상조건 등 활동방향을 채택하는 이른바 민의 집약 기능을 해냈다.

동시에 광주 민중은 스스로 '투사회보'(뒤에 '민주회보')와 '대자보'를 개발하여 계엄당국의 날조와 기만 선전을 규탄하고 진상과, 시민행동강령 및 소식을 전달하는 등 민주언론을 발전시켰다.

실제로 광주가 자유롭게 된 직후부터 관제매스컴은 연일 광주는 무법천지라고 악선전했지만, 광주 주재 외국기자들이 놀랄 정도로 실제의 광주는 고도의 자율성과 협동정신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쌀(비축미)은 시청 공무원들의 협조아래 공평하게 배급됐으며 생필품가게에서는 생필품이 매점매석 없이 나누어졌다.

또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공공시설을 보호했으며 고교생들은 거리를 청소했고 앞다툼 현혈로 피는 남아돌아갈 정도였다.

"조선명태는 두드려야 맛이 난다""한국사람은 셋만 모이면 파벌이 생긴다"는 등 독재권력이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쓰는 민중의 자치능력(민주능력) 폄하나 왜곡은 여지없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㉞ 자연발생적인 투쟁의 성과는 그 성과를 지키고 키울 바른 지도 없이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천 여명의 숭고한 희생과 감동어린 교훈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중항쟁은 깃발이 내려졌다.

언뜻 소박하게 생각하면 이 패배는 계엄군의 압도적인 물리력 때문이라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답은 충분히 올바르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 대답에는 물리적 위용이 버티는 한, 민주화운동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과오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견해엔 사물의 운동법칙을 잘못 이해한 비과학성도 엿보인다.

세상의 어떤 물리력도 완전 무모습적인 존재는 아닌 것이다. 투쟁이 강렬해지면 물리력은 자기분열증을 앓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연계되어)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확실히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견해도 의문은 남는다. 3·1항일민족해방운동과 4·19민주혁명은 이 물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지역 동시(연계) 투쟁론은 필요조건이기는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투쟁의 구체적 조건을 분석해내는 일이 중요해진다.

광주민중이 광주를 자유도시로 만들 당시 그들에게는 "왜 싸우나"의 소박한 수준의 이유는 있었으나 '그 뒤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자유도시 광주는 투쟁의 거점이 아니라 협상의 담보로 변해갔다.

이것은 적극적·확산적 투쟁화 대신 수습과 협상이 사고의 중심 개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습위원회 대(對)민주수호 국민대회'라는 기본구도속에서 민중의 역량이 주체화·조직화되기보다는 대상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비록 명예로운 수습 아니면 최후항쟁이 거듭 결의되었지만 수습위가 구체적으로 행한 주된 조처는 협상과 총기회수와 질서 유지였다.

봉쇄된 도시에는 '협상의 결과'와 '기다림'이 자리잡아 갔다.

그러므로 광주의 봉쇄 속에서 협상의 실패=재진입이란 상황을 읽으며 극히 일부가 '건물내에서' 최후항쟁을 시도했지만 고립과 포위망의 압축 속에서 그 운명은 이미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만일 투쟁의 성과를 지키고 키우려했다면, 광주 민중은 '중심'을 형성하고 그들의 지도 하에 먼저 투쟁의 성과를 주체화하는 노력을 통해 투쟁이 자신들의 사활적 일로 받아들여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리고 조직화를 통하여 힘의 재생산 구조를 마련하고, 체계화를 통하여 투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기울여졌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중심'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대안과, 결의 속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벌일 때 비로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민중투쟁에는 그 구심력이 없기 마련이며 설사 '중심'을 형성하려 해도 상황과 시간이 그것을 가능케 하지 않는다.

### Ⅲ 광주민중항쟁은 반외세·반군사독재·민중투쟁의 산봉우리며 민주화운동은 그 산을 넘어야 한다.

5월 민중항쟁은 좌절했지만 민중을 영원히 패배시키지는 못했다.

학생세력을 필두로 기층운동력과 지식인운동력은 5월의 좌절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서서히 패배의식을 극복해가며 각 부분에서 운동들을 건설하고 내부역량을 복원·강화하면서 투쟁성을 회복했으며 각지역에서도 속속 지역운동을 활성화시켜왔다.

오늘날 민주화운동세력은 각부분과 각 지역에서 대중노선과 조직운동의 기치 아래 운동에 대한 실천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운동력의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또 각 운동 상호간에 존재하는 토대와 경험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연대를 형성하며 운동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려하고 있다.

실로 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한단계 성숙한 발전을 요구 받고 있다.

이 요구는 향후 몇년간의 투쟁이 민주화 투쟁의 미래를 방향지을 중대한 공방전이 될 것이란 예상 때문에 더 더욱 광주민중 항쟁의 다양한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극복을 위한 이론적 작업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 일련의 노력은 각 부분 운동력 내부의 또는 각 부분 상호간의 집단논의를 통하여 획득되고 그 구체적 실천 속에서 검증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화의 내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성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주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과 유화정책 지속의 배경

## 1. 자본축적의 위기와 유화정책의 전개

해외 독점(금융)자본에 의거하여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60년대 이후 국내자본의 취약성과 국내저축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국내독점자본은 필연적으로 종속적 성장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해외 독점자본의 입장에서 국내 자본을 선택적으로 독점화시킴으로서 신식민주의적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중을 그 핵으로 하여 왔다. 자본의 독점화와 함께 발생하는 독점자본과 민중의 모순을 자본의 고도집중에 의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

작년 주요 상장기업의 11%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전년 대비 23%나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 또한 격감하여 79년 2조 8천억원의 설비투자가 83년 1조 9천억원에 머물렀으며 제조업의 가동률도 하락한 것 등이 한국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위기의 근본적 내인과 외부적 조건으로는 다음 사항이 지적될 수 있다. 근본적 내인으로는 내외독점자본에 의해 개편된 한국의 경제는 자생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경제잉여의 축적(자본축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1984년 국민총생산의 5%에 달하는 이자상환 및 과실송금은 국민총생산의 성장율 7.8%에 비견하여 볼때 잉여의 대부분이 해외로 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 무역에 있어서의 엄청난 부등가교환(수출품의 덤핑과 수입품의 독점가격)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산하는 잉여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의 재생산구조에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누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독점자본의 자본축적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에서가 아닌 비생산적 부분(토지투기, 인플레이, 고물가, 공영개발)에서의 이전에서 충당하였으며 그 부담을 때에 따라서는 중산층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이전(8·3조치, 공영개발)시키거나 환율인상, 재정적자 인플레이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의 하락으로 전국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의 집중을 꾀하였다. 중산층 혹은 전국민으로 부터의 부의 강제적 이전과정에서 권력과 경제계는 야합을 하게 되며 이 야합이 바로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내재적 요인이 된다. 부의 강제적 이전과 함께 파생된 지하자본이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대부분이 비생산적 부분으로 도피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재적 요인과 함께 자본 기술 집약적인 국제독점자본국과 노동 원료 집약적인 후진공업국 사이의 격차의 증대와 후진공업국 사이의 공업화의 평균화로 인한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의 분업체계의 구조적 변화이다. 한국 경제는 섬유, 신발, 합성수지, 조선공업을 필두로한 각종 분야에서 수출의 감소와 싸구려 수출을 경험했다. 더우기 미국의 세계자본주의 유지 과정에 따르는 군사비지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부담의 후진국전가 및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장벽의 강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후진국의 시장개방의 요구등 자국의 산업합리화를 통한 모순의 해결방식이 아닌 신식민주의적 정책에 의해 한국경제는 험난한 국제무역에서 지극히 무력하게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위기를 더해가고 있다.

위기의 현상은 기업의 부실화, 금융의 위기, 수출의 감소, 조업률의 하락 등이다. 현재 은행의 여신관리기업은 현대, 대우, 삼성, 럭키금성을 비롯한 66개 재벌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외건설 관계기업이 95%인 은행의 여신기피산업은 30여개로 이들 부실기업에 걸려 있는 부실채권은 4조 5천억원이다. 이에 대한 금융지원을

우리는 이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제약하고 있는 제 모순과 그들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①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②오늘날 모든 운동력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중, 민주, 민족이란 세 내용과 통일적 인식에서 빛나는 혼란과 차이를 극복해냄으로써 인식의 일치를 통해 운동의 일치를 이룩할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실천적 구심력을 개념적으로 설정하고 그 구체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부분운동단계에서 구심력의 설정과 인식은 ①운동력 내부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 주고 ②운동력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민주화운동세력의 반외세, 반독재투쟁의 모든 성과는 이 구심력을 지향할 올바른 운동력의 발전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면 투쟁, 일면 건설은 투쟁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된 역량으로 투쟁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통일적 인식에서 비롯한다.

또 현재와 같은 부분운동 단계에서도 각 운동력 상호간의 적절한 연대와 친교는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①매관군부·독점세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그들을 최소화시키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②운동력을 그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③나아가 구심력의 형성과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부분'(부분운동단계)과 '전체'(통일적 조직역량)의 역동적 관계는 '부분'과 '전체'가 직선적 단계적, 기계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분'과 '전체'는 각 차원마다 제각기 작은 역동성과 큰 역동성을 갖고 모두 양과 질의 역동적 발전을 수반함을 의미한다. 즉 각 부분운동 내부의 양적, 질적 발전이 수행될 때에는 반드시 부분 운동력 상호간의 연대와 통일성이 요청되기 마련이다.

말하자면 각 부분운동의 심화·발전은 운동의 각 부분, 각 지역 확산뿐만 아니라 더더욱 연대와 통일성을 요청함으로써 원심력과 구심력의 동시작용을 경험하게 되므로 현실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전체'의 형성은 극히 예측 불허이며 항상 대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형성과 대비를 위해서라도 '전체'의 형성과 그 깃발 아래의 대동단결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부분운동단계에서도 운동의 올바른 편성 속에서 연대와 연대의 심화·발전을 성취해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않될 것이다.

셋째,그와같은 운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운동력을 조직에 편입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조직운동을 통해서만이 집단경험을 발전시켜 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축적시킬 수 있다.

조직운동은 운동력의 재생산 구조와 체계화를 가져다 준다. 튼튼한 재생산구조는 운동의 복원력을 가능케 해주며 체계화는 내부규율과 역량배분을 고도화시켜 운동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준다.

그러나 부분운동단계에서의 조직운동강화는 또 집단 이기주의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각 부분운동력 내부에서는 내부교육의 강화를 통해 운동의 경험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실천적 인식을 심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통해 각 부분간 운동력의 통일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궁극적 목표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구체적 대처 사이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궁극적 목표에 접근하려는 현실의 구체적 대처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역량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현실을 제약하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역량배분과 배분방식에는 일정한 타협이 전제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외압과 독재에 대한 민주화운동역량의 배치는 현상적으로는 반독재권력에 집중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외압과 독재는 그본질상 서로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는 문제들이므로 단계적으로 파악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긴 이야기는 모두 광주민중항쟁을 교훈삼아 좌절을 되돌이 하지 않으려는 원칙적 초보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정작 극복을 향한 고난의 길이 앞에 열려 있을 뿐이다.

오늘날 그날의 함성은 사라졌고 그날의 용사들은 누어 있지만 학살책임자는 살아서 웃고 있다.

이 미완의 투쟁을 끝내기 위해 살아 있는 모든 동지들이 그날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치고 있다.

그리고 가신 뉘를 기리며 그날처럼 외치며 나아가고자 한다.

‘언발에 오줌누기’로 순간의 연명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융지원 그 자체가 경제를 점점 수렁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의 담보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금융지원은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며 금융지원의 재원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지함으로써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의 한계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독점자본 및 부수되는 자본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정책이 환율 인상이다. 환율의 인상은 수출의 증대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독점자본에게 원시적 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환율인상은 물가 상승을 필연적으로 결과하지만 환율인상과 물가상승의 비율의 차이에서 독점자본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환율인상은 단기적인 효과 - 수출의 증대와 원시적 자본축적의 계기 - 가 있는 반면 500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외채규모를 감안할 때 환율인상만큼의 부담이 뒤이어 늘게 됨에 따라 장기적 효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본의 집중에 의한 위기 - 내외독점자본과 민중의 모순 - 를 자본 집중의 가일층 고도화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경제의 실상이다.

여기에서 부실기업정리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재벌 순위 5-6위에 이르는 국제그룹을 해체하는 것은 자본집중의 고도화를 통한 위기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을 해체하여 각 기업을 다른 재벌에 붙여 주는 것은 바로 경쟁력을 상실한 독점자본을 해체하고 해체된 자본을 기존의 독점자본에 덧붙임으로서 자본집중의 고도화를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본집중의 고도화를 통한 독점자본의 모순해결이라는 독점자본주의의 발전논리인 것이다.

부실기업 정리는 독점자본의 모순해결 방식인 동시에 군사독재정권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물적토대의 확보와 해외독점자본의 투자환경조성이라는 면을 지니고 있다. 잉여의 계속적인 누출은 자본의 계속적인 유입을 필요로 한다. 환율인상과 부실기업정리를 통해서도 국가독점자본의 내부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가 권력은 해외독점자본의 요구에 전면 부응하는 종속성을 완결함으로써 위기의 파국을 유예하고자 한다. 4월 방미와 IMF총회의 서울개최로 예정된 종속성의 완결은 금융시장의 개방(외국은행의 수출어음채할인, 신탁업무 허용)과 상품시장의 개방(오렌지 담배 등)과 투자여건의 조성등으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부실기업의 정리는 해외자본의 한국에 있어서의 안정적 이윤을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구조재편의 일환으로

투자선의 정비를 함축한다. 작년 해외건설 및 해운정비의 실패는 부실기업의 확산을 선도했고 국제 그룹의 해체는 부산지역의 경기급락과 10배 이상의 부도율 상승, 실업의 증가를 낳고 있다. 결국 부실기업의 정리는 4조5천억원의 부실채권의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통화증발, 실업의 증가, 지방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모든 부담을 은행의 부실화를 통한 국민에의 전가의 문제이다.

작년 외국인 투자 자유화조치에 이은 후속 정비작업의 진행, 국내 외국은행 순이익 27% 상승, 외국은행의 재할인과 신탁업무의 허용 및 IFC 주식투자기금의 본격 유입, 외국은행의 상업어음 채할인 허용 등은 경제 잉여유출의 직접성이 증가되는 추세를 가리킨다.

중공의 세계사적인 영향력의 증대와 적어도 한 세대의 현대화 정책은 중공을 도외시키고는 세계전략을 세울 수 없고, 새로운 시장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이해와 부합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비롯한 제 조건의 변화를 어느 정도 전제한다. 작년 민항기 사건의 해결에 이은 어뢰정 사건의 해결, 방일, 남북간의 경제회담, 수재물자의 도착, 국회회담 제의 등은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여건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의 질적 변화를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내외독점자본 및 그 권력과 이 체제 하에서 착취와 수탈을 당하는 민중간의 모순을 첨예화시켰으며 이 모순은 경제의 위기와 권력의 통치능력 상실로 인하여 그 폭발의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권력 및 독점자본과 민중의 모순은 2·12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양상의 일단이 드러났다. 권력 및 내외독점자본의 모순이 첨예화함으로써 중산층의 권력으로 부터의 이반이 현저하여 가고 중산층의 이반은 권력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 모순의 완충대를 상실하여 민중의 봉기 위험성과 남북 긴장완화의 주체로서의 협상력의 상실을 가져 왔다.

완충대의 상실은 내외독점자본의 입장에서 잉여의 착취와 수탈구조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점증하는 권력에 대한 불만이 적대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반하였거나 부동하는 중산층을 다시 권력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 완충대로서의 중산층은 결코 독점자본주의하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생산지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독점자본과 공존할 수 있는 테크노크라트와 관리자, 자영업경영자(의사, 변호사 등) 지식인을 의미하며 정치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독점자본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면은 독점자본과 민중의 모순의 위기에서 독점자

본을 중심축으로 한 중산층의 흡수재편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재편·변화기는 각세력에 있어 위협속의 기회이다.

해외독점자본은 적어도 한 세대의 중공시장을 겨냥하여 한국경제를 중간고리적 경제체제로 재편하고, 개방경제를 통한 경제잉여의 신속한 확보와 개방농정을 통한 농산물 시장 확보 및 저임 기반의 유지와 민중적 모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배메카니즘의 부식과 그 내부에 긴장완화의 대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배양을 꾀한다. 이에 현지의 분할조정 센터(divide and control)의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국내 독점자본세력은 현 군사독재권력으로 부터 약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중공을 넘나들고, 정치 경제적 재편 위기의 적용에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전자산업 및 건설업, 자동차산업 등을 필두로 진척되는 직접 및 합작 진출 혹은 진출을 위한 제휴의 속도는 경제잉여의 누출을 보충하여 왔던 월남이나 중동 특수에 필적할 수 없다.

현 군사독재권력은 환율인상을 통한 부의 간접적이전, 재개발과 부실기업의 정리를 통한 직접이전 등으로 종래 지하 투기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여 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전-노-노 체제를 구축하여 총력전을 전개함으로써 주어진 구도 내에서나마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방미를 앞두고 해묵은 헬리콥터 문제를 제기하고 외채문제를 거론함으로써 한국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국내 여론을 동원하여 협상력을 높이며 계속되는 시장개방 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방미를 계기로 구도내의 타협선을 좀 더 유리하게 구체화하려고 한다. 2000년대의 환상으로 <광주사태>, <부정부패> <민생> <외채> 문제 등의 4대문제를 회피하고 언론과 정보기관을 통한 정치공작으로 야권을 분열시켜 재편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다.

보수정치세력은 80년도의 실패를 교훈 - 한국의 정치 권력은 미국과 군부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 삼아 주어진 구도내에서 불리한 여건을 딛고 대외타협과 대내통합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선거부정을 묵과하듯 4대 문제를 사용할 수 없으나(사용하면 다 죽는) 위협 효과를 가지는 핵무기처럼 넉스지 들먹이며 협상력을 높이고자 한다. 민중의 생존요구를 신중히 선언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갈 곳 없는 민중의 반사 지지를 획득하여 중산층의 흡수 재편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2·12 총선에서 크게 부상하고 이제 100석이 넘는 거대세력이 된 신민당을 장내(場內)로 보고 중시하되 장외 민중의 힘으로 보완하고 장내에서의 투쟁이 제도의 한계에 봉착할 때 장외로 문제를 끌

어냄으로서 정치협상력을 높여 정치권력 배분에 참여하려고 한다.

한국의 정치권력은 미국과 군부 및 재계의 동의와 중산층의 지지에 의해서만 성립이 가능하며 각 세력은 모두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다. 권력을 둘러싼 군사독재권력과 보수세력의 각축은 주도권 장악과 유리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 각 세력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타협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이익의 보장을, 군부에게는 군사독재의 前非를 불문에 붙이는 타협과 독점자본에게는 기존의 이익 보장과, 중산층에게는 일정한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축전이 선거이후 유화정책의 본질이며 유화정책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단계상 현 정세의 위치파악은 70년대의 점검에서 비롯된다. 70년대 독점자본과 민중의 모순은 권력과 몰락하는 중산층의 투쟁으로 나타나고 이는 유신 내지 긴급조치로 요약된다. 여기서 양심적 지식인의 이반으로 재야가 형성되며, 중산층 선도적 지식인과 연대한 민주노조운동 및 농민운동이 전개된다. Y·H, 부마, 야당총재 제명 등 극도의 탄압국면 하에 응집된 모순의 연쇄적 분출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정권을 대치하려는 보수연합구도를 강렬한 민중의 의지와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과 유신잔재의 반동으로 무산된다.

위기의 폭력적 해소는 모순을 심화시켜 민중의 적대 의식을 배양할 뿐이다. 광주의 혼은 부산미국문화원 사건을 필두로 그것을 이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양심을 움직인다. 보수정치세력과 지식인운동간의 연대에 대한 민중의 좌절은 운동의 자생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운동은 70년대의 반성을 적극적 실천으로 구현해 나간다. 광주폭력을 원천적 기반으로 하고 부정부패를 물적토대로 한 권력의 정책수행능력 부재는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의 위기를 맞아 새로운 지배전술의 창출을 요구받고 있다.

전야당총재의 단식, 청년의 선도적 결단, 뒤이은 상하의 민주화 요구 및 운동 역량의 강화로 드러나 강압 통치의 한계를 복합조치를 필두로 유화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 민중운동에 대한 지속적 ‘탄압’과 복지, 복지, 해금으로 대표되는 지식인에 대한 단속적 ‘회유’가 병행하는 일련의 유화조치가 실시된다. 장외에 대한 장내의 흡수틀로서의 2·12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민중의 요구와 중산층의 이반을 기반으로 유화정책은 제2기로 접어들고 있다.

## 2. 민주역량의 수준과 민주화 운동의현황

민주화의 핵심 민주역량의 결정적 본령인 민중의 요구투쟁은 근간 70년대 수준의 회복을 넘어서 일부는 더욱 진척된 양상의 질을 보이고 있다.

선도적 양심의 지식인과 연대하여 전개된 70년대 후반 민주노조운동은 민중적 지식인 운동 차원으로 회복된 한편, 80년 제휴의 좌절을 극복한 민중화된 지식인과의 일체성 속에서 전개되는 현 민주노동운동은 점차 자생역량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유니전, 협진, 대우자동차, 성원제강 등의 노조설립투쟁은 역량의 자생성, 부문의 중심성, 혹은 남성육체노동자의 투쟁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70년대의 상징인 청계피복노조는 연대와 제휴를 주도해 가는 원숙한 경지를 보이고 있다. 한 세대를 정리하는 정치경제적 변화국면을 맞이한 지금, 전체적으로는 순수노동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외채부담을 포함 가구당 평균 300만원에 달하는 농가 부채의 부담은 중속적 국가독점자본의 개방농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본래 유장한 주기를 보이는 소농운동의 전환점에 접근을 가리키는 한 지표이다. 현재로서는 정책적 배려로 자생되는지하자본의 일부에 의해 배양되는 세력과 그에 대한 피해자각 세력과 사이에 모순이 배태되고 있다.

70년대 4대문밖으로, 시외곽으로 추방된 도시빈민들은 이제 올림픽 환상의 물적토대 확보 욕구까지 회생되어 새로운 국면은 맞이했다. 목동 신정동을 비롯해 양동, 신림동 등으로 확산될 국가투기사업 및 빈

민 소산 정책은 빈민투쟁의 경험을 도처로 확대시킨다.

이러한 기층 민중운동의 고조는 시민운동에 화급된다.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느끼는 중간시민층 역시 기회주의적 권력지향성과 심정주의적 민중지향성의 양면을 자기이익 추구의 고유 중심을 매개로 통일해가며 시시각각으로 활성화된다. 이는 시민운동과 기층민중운동의 분리를 본질적 목표로 하는 유화정책에 발맞춰 광범히 확산될 수 있다. 예컨대 외채의 본원적 부담자인 민중의 생존투쟁이 중산층 시민의 국제보상운동으로 가려질 수 있다.

현 민주역량의 수준으로 볼 때, 아직새로운 질적 발전을 양적인 확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전반적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적 활성화 차원에 놓여 있고 시민운동은 바야흐로 전반적 활성화 기회를 맞이하였다. 제3세계 민중운동의 실제적 맹아와 서구적 시민운동의 관념적 맹아를 포괄하고 있는 현 수준 최강의 민주역량인 학생운동세력, 그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청·장 세대들은 현재 민주화운동의 민중사적 전개에 한계기인 광주를 기억하는 서울의 봄을 맞고 있다.

## 전-노-노 체제와 야권정치세력의 대결과 그 전망

### 1. 서론

파란을 몰고왔던 2.12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는 독재권력과 야권정치세력의 체제개편에도 연쇄적인 가속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력교체의 최대 난제가 걸려 있는 집권제2기에 들어간 전정권은 정보기관과 군출신이 대거 등용된 내각개편(2.18)을 단행했고, 한계에 달한 민정당의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태우를 새로운 정점으로 하는 당직개편(2.23)을 단행했으며, 3월 6일 양김씨를 포함한 마지막 해금조치를 서둘러 취했다. 또한 학원가의 큰 쟁점인 학도호국단설치령을 일단 폐지한 바 있고, 3월 27일 민정당 전당대회에서는 차기대통령후보자격과 선출시기를 명시한 당헌개정을 통과시키고 허구적 의회주의와 민주적 제스처의 강

화를 내용으로 하는 당운영기본방향과 12대 국회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4월 3일 민한당의 붕괴에 의한 야권통합의 급진전은 독재권력의 다당제구상의 좌절과 함께 신민-민정 양당체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가져왔으며, 해금 이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양김씨 중심의 야권정치세력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야권정치 세력의 급속한 재편에 의한 충격적인 상황의 변화는 개원벽두부터 민주화일제시와 전두환 퇴진요구, 개헌불가피론과 불가론, 사면복권 석방 등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강온이 교차되는 탐색 공방전과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가의 학생회구성, 장성광부들의 파업과 각 사업장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노조 설립 및 임금인상투쟁, 목동철거민들의 대규모 시위등

빈발하는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은 정치권의 활성화와 함께 80년 '서울의 봄'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의 민정이양 도미노현상은 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체제유지전술의 변화와 함께 한국에서도 민간정부 수립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부른(?) 기대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현란한 정국전개속에서 국민들의 이목은 전-노-노체제로 진용을 바꾼 독재권력의 88년을 향한 권력교체구상과 프로그램 및 내부역학관계, 양김씨를 중심으로 한 야권정치세력의 구상과 지향 등 제반 정치세력의 역관계의 설정과 그 추이에 집중되고 있다. 범인들이야 이들의 뱃속을 깨물어 볼 수도 없고 또 소소한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겠지만, 빛 좋은 구호만이 난무하는 80년과 같은 안개정국이 재현되는 가운데 또다시 민중을 떠돌릴 어떤 음모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만큼, 작금의 상황전개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제기된 논의들에 입각하여 정치권의 전개상황과 그 본질적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 2. 전-노-노체제의 포석과 그 복선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은 2.12총선을 통해 대도시등에서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의석을 확보했고, 투개표과정에서의 대규모 부정만은 자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고 일정한 성취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권의 폭력성과 반민주성에 대한 대내외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불식했다. 또한 장외정치세력의 제도권편입을 통해 정치력을 과시하고 민주화운동-기성정치세력-민중의 분할지배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즉 한편으론 권력개편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친위개혁주도세력의 제도정치권포진을 일단 달성했으며, 신민당의 부상과 함께 해금조치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기성정치세력과 제도정치권에 집중시킴으로써 군사독재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신당의 강력한 부상과 그에 뒤이은 야권통합 민주화운동과 민중의 폭발적 결합가능성, 군의 정치개입비판, 광주사태진상규명과 책임자처단요구, 그간의 실정과 부정부패등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비판은 적지 않은 지배세력내부의 동요를 가져왔으며 전정권에게 더욱 고도한 민주주의적 제스처, 기만적인 정치적 활성화에 의한 지배전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면에서 한반도주변정세의 긴장완화추세와 남북대화, 대중공관계 확대 가능성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함께 국내모순의 해의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현 정권에게 대외교섭력강화를 위한 합법성

의 강화, 즉 유화정책의 압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강력한 정치·경제·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일등의 외세도 장기적 이익의 관철을 위해 전정권에게 부분적 민주화조치와 평화적 정권교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제요구에 당면하여 전정권은 음성적인 물리적 통제력의 강화와 아울러 민주주의적 제스처와 개량주의적 의회주의의 강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바, 그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전정권의 집권2기 첫 포석인 내각개편과 민정당직개편, 민정당의 당운영기본방침을 통해 살펴보자. 2.18개각은 노신영안기부장과 박세직(수경사령관재직시 후계자로 공공연히 자처, 예편된 뒤 안기부차장역임) 등 정보통과 군부출신(6명)의 등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안기부장에 임명된 경호실장출신의 장세동, 비서실장에 이규호의 재기용, 강경파로 알려진 손제석의 문교장관임명에서 살펴볼 때 정치적 위기에 대비한 힘과 충성심이 강조된 강온양면의 포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무수석의 신설은 앞으로의 개헌에 대비키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안기부장에 경호실장출신을 임명한 것은 그간 군·경등으로 다원화된 정보체제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대통령직속의 안기부를 통해 제도폭력의 음성적 폭력으로의 대치내지 보원을 적극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23 민정당당직개편에서는 기존체제 고수에서 전환, 5.17쿠테타의 핵심인 노태우를 전격적으로 대표위원에 임명했고, 국회상임위원장 중 반수가 여전히 군부출신으로 메워졌다. '당풍쇄신론' 하에서 친위강경세력의 전면부상이 좌절 내지는 유보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노태우가 대표위원으로 등장한 것은 민정당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시점이 독재정권의 권력교체구상이 구체화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할 때, 지배세력내 지지기반은 미지수이지만 그가 후계자로서 가늠될 수 있는 위치의 인물이라는 점과 단기간에 정무장관, 체육부장관, 내무장관, 올림픽위원장, 체육회장등을 두루 거친 그의 정치적 성장과정과 대내외적 이미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등장은 여러세력의 이해가 함축된 흥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씨도 기본적으로는 5.17의 공동주역으로 전두환과 공동운명체라는 점과 그의 역할이 바람직 역할에 그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전정권의 내각개편과 당직개편은 고령의 이재형을 국회의장에 임명한 것과 함께 군출신 이외의 인물난속에서 앞으로의 심상치 않은 정국에 대비하는 친정체제와 정치력강화의 어느 정도 총력적인 포진으로 생각된다.

한편 민정당이 3.27전당대회에서 발표한 당운영기본

방향과 3월 29일에 발표한 12대 국회운영방침을 보면, “이제 새로운 정치의 정착과 더불어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된 토대가 비리와 선동의 비민주적 사고와 반민주적 형태에 의해 위협받는 일이 있다면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전씨의 경고와, “모든 정치문제는 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원칙아래 국회와 정당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여망에 따라 장외정치 폭력정치의 소지를 배제하고 대화로 협의, 해결해 나간다”는 선언속에서 현 정권의 기본적인 정국운영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2대 선거결과를 ‘안정과 변화 및 발전의 조화에의 요구’로 받아들이면서, 집권 제2기의 과제와 원칙으로서 “자유, 개방, 정치적 자유의 확산, 대화와 화합, 당체질과 역량강화” 및 “정치문제의 장내수렴, 원내외와의 대화정치활성화, 소외계층 및 현실불만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배려”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대통령후보선출절차를 명시한 당헌개정, 12대 국회전략으로서의 “장의·폭력정치의 배제” 표방과 함께 기본적으로 개량주의적 의회주의의 강화를 통해 투쟁적 운동세력과 보수야당정치세력(=중산층)을 분리함으로써, 학생·노동·청년·재야운동 등 조직적 운동선도세력의 예봉을 꺾어 운동으로의 대중 결집을 저지하고, 아울러 민정당의 역량강화와 독재세력내의 위치제고를 통해 권력내 경쟁요인도 친위체제로 강화된 제도정치권으로 흡수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민정당의 합법적인 정치역량강화의 성패는 이민주신당총재발언과 최근 급격히 진행된 야권통합에 대한 권력내 친위강경세력의 반발에 의한 정국 경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의 지배세력내 권력투쟁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정계판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장의 전면실시는 기대하기 어려워도 87년 지방자치제실시에 대한 재확인 중안권력을 약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수정치세력에게 지방의회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반과 기득권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지방분권을 통한 운동과 정치적 불만의 분산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독재권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력교체방식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여러 가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일단 현 정권의 기본 성격과 대외의 존성으로 볼 때, 그들이 정권교체의 기본 축으로 ①의 세의 이익, ② 현재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과 그 지지세력의 기득권과 지위보장, ③ 그 밖의 군사독재세력(군벌+관료+독점재벌)의 전체적 이익에 대한 확고부동한 보장 내지는 이것들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선을 추구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 3자는 상대적 갈등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할 때 상정될 수 있는 권력교체방식에는, 첫째로,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대로 전중심체제를 계속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 하나가 국제정세의 급변, 경제적위기와 함께 정권의 위기시에 그러한 정권위기를 과장, 역이용하는 노골적인 반동의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비견되는 안보나 통일문제, 전쟁발생등과 같은 명분의 강력한 대체(실득력은 없겠지만)와 정치적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이는 야권정치세력, 민주화운동세력, 민중의 전면적 반발을 초래하고, 권력내부의 심각한 동요를 필연화할 것이다. 또한 기만적 유화정책의 모든 이익의 포기와 대외고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물론 대통령직선과 단임조항철폐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통한 재집권 방식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정치적 부채를 진 현정권으로선 역시 명분을 얻기 어렵고 많은 모험을 수반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대체로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②를 중심으로 한 위의 요구를 충족시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①, ③을 심각히 위협하는 방식이다.

둘째로, 지배세력 내부의 타협에 의해 대리타자를 선발·지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1) 기존헌법과 제도들을 유지하는 선상에서의 군부 지배세력내의 인물 교체방식과 2) 이원집정제등의 개헌에 의한 방법이 있다. 1)의 방법은 야권정치세력을 포함한 범 국민적인 직선개헌요구와 반군사독재투쟁에 부딪쳐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되겠지만,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방식의 부분적 개선등의 미끼를 제공하면서, 한국정치의 오랜 숙원이라고 하는 평화적 정권교체후의 발전적 개헌을 강조·약속하는 기만적 방식에 의해 추구될 가능성이 있다. 노총리의 개헌불가발언, 민정당직자들의 현행 헌법 고수의 논리나 개헌에 대한 완강한 거부반응, 88년까지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발언등을 볼 때, 일단 독재권력은 제한된 양보를 통해 1) 안을 최선의 안으로 고수하려 할 것이나, 이것은 2) 등의 다른 불안을 위한 카드일 수 있다. 2)의 방법은 대통령(안보=군통수권, 외교), 수상(내정=치안권...)으로 권력을 분리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의 여지가 많은 안이다. 현행 제도를 대체로 유지할 경우 양자 모두를 집권당이 장악할 수 있고, 군의 영역을 성역화시키고, 비상시에는 대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반 현행 제도와 다당제의 존립(현행제도와 선거하에서도 집권세력은 위기를 느끼고 있다)을 필요로 하며, 야권정치세력과의 타협여부, 민중의 용납여부가 그것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독재체제와 군의영역을 보호하면서, 수상직까지는 자유경쟁(?)을 허용해 합법적인 틀내의

제한된 정치적 위기의 연출을 통해 민중의 혁명적 열기를 희석화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한국의 병영국가적 성격과 권력의 생리 등 제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속에서 장기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변화의 여지가 많은 만큼 미국과 독재권력내부에서 주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셋째로, 앞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방법인데, 군의 지위보장, 정치적 책임면책등 외세와 군사독재정권의 기득권보장을 전제로 하는 타협에 의한 민간인(보수정치세력)에의 정권이양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통수권 및 치안유지권과 같은 권력체제, 관료체제등 지배체제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위의 세요소의 보장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민중을 배반하는 기만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브라질등 남미의 경우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을 필요로 하나 한국사회의 제반 조건의 상이성과 특수성을 좀더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현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프로그램은 군사독재세력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형식변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기만적인 개량주의적 의회주의와 민주적 제스처를 통한 분할통치와 제반 모순의 은폐 내지 완화기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본격적인 권력의 변화(=동요와 위기)시기의 첫 포석인 전-노-노체제도 이러한 과정에서 터져올라올 민주화운동과 민중의 저항을 기만적 양보와 단호한 물리력으로 봉쇄하면서 권력교체의 이니셔티브를 고수하려는 포석에 다름 아닌 것이다.

### 3. 양김씨 중심의 야권정치세력의 재편과 그 지향

전-노-노체제의 출범과 함께 12대 국회와 정국에 임하는 야권정치세력의 기본골격도 대강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다. 광주사태와 직선개헌문제를 “핵폭탄” 운운하는 데서 드러나듯, 여러가지 굴절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핵심적 정치쟁점과 공약을 내건 신민당의 제1야당 부상은 이미 향후 정국의 뜨거운 정치열기를 예견케한 바 있다. 게다가 3.6 전면해금으로 양김씨가 사실상 정계에 복귀하게 됨에 따라 야권정치세력의 재편성은 제도정치의 틀을 급속히 변화시켜가면서 양김씨를 중심으로 원내외에 걸쳐 광범하게 진행되어 가는 느낌이며, 그 귀추가 주목돼 온 신민당과 민한당의 전격적인 통합의 진전까지 가세해 정계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당초 다당제유지를 위한 독재권력의 필사적 노력과 양당간의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인해 단기간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던 신민-민한당간의 통합의 급진전은 신민당과 민정당간의

실질적인 양당체제로 정계판도를 뒤바꿔 놓았다. 정계 재편성에서 비교적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당도 당원들의 반발에 의해 단일지도부를 채택하고 기존의 준여적 색채에서 준야적 색채로의 변신을 통한 존립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진호는 김종필씨의 귀국과 거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과연 권력의 생리를 극복하면서 타 야권세력과 손을 잡고 현 독재권력과 대결적인 위치를 형성할 수 있을지 혹은 독재권력과의 모종의 타협에 의한 권력내의 참여라는 형태로 나타날지가 주목거리이다. 또한 양김씨가 공동의 장을 맡고 있는 민주화추진협의회도 신사당, 한국사회당과 같은 잔존하는 혁신정당과 민주헌정연구회의 가입을 통해 조직확대를 해나가면서 원내외의 정치적 구심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야권의 재편과 함께 정계판도는 전-노-노체제와 양김씨중심의 야권정치세력의 양립지세로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88년 정권교체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야권정치세력의 구체적인 방향과 행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상세히 드러난 바는 없으나, 향후 정국전개의 중심축이 될 양김씨의 구상과 프로그램을 더듬어 보면서 추정해 보기로 하자.

우선 양김씨의 경쟁속의 제휴관계는 80년의 경험에 대한 나름의 반성과 향후의 정국전개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렸다.” “지금은 정권쟁취의 단계가 아니라 민주회복의 단계다”라는 일치된 언명은 이들이 선블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판단을 추측케한다. 이는 아직까지 이들의 등장이 독재권력에 대한 견제와 실익이 없는 기만적 정치활성화와 분할지배의 고도화를 위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상황적 여건을 말해준다. 이리하여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며, 지금은 구여, 구야, 재야등을 망라하는 ‘반독재민주회복을 위한 총연합전선의 시기’라고 언명하고 있다. 이는 민주협 의 창립선언문인 민주화투쟁선언(84.5.18)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으며, 어느 집단 또는 개인과도 연대할 것”이란 선언속에서도 이미 나타나며, 심지어는 “민주화가 야당의 전유물만은 아니며, 앞으로 민주화는 정부와 야당, 재야민주세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표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두 김씨는 모두 현행 헌법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임과 집권당내 인물교체는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개헌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4월 9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의 “전대통령이 재출마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된다면 전비를 묻지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개헌의지를 엿볼 수 있다. 즉 국민의 자유선택권유무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그것을 가능케하는 진정한 자유선거를 위해서는 언론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지방자치제, 대통령직선제, 노동제와 학원의 자율과 민주적 권리의 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선거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씨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4자회담등 정부와 야당정치세력의 대화를 주장해 왔다. 대화가 불가능하면 민주화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양김씨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영삼씨는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내각책임제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대중씨는 대통령중심제인 제3 공화국헌법으로의 환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원집정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씨의 민주협공동의장적 수락은 기성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기반과 거취를 분명히 한 것이며, 그와 아울러 양김씨가 당분간 민주협을 중심으로 활동해나기로 한 것은 제도정치권 및 민주화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제도정치내에서의 경쟁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독자적인 기반으로 제정당사회단체의 범야권정치세력을 규합하여 앞으로의 정국전개에 대비한 장내외의 정치적인 실력배양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협에는 혁신계정당의 인사들과 함께 구여 인사들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고, 민주협을 정당적 차원이 아닌 구국을 위한 국민운동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성정치세력의 색채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양김씨의 부분적 발언과 움직임을 통해 볼 때, 이들의 구상은 개략적으로 ① 정치질서의 현상타파 -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원내의 야권통합과 민주협을 중심으로 한 구여, 구야, 혁신계등의 광범위한 세력재편, ② 정치환경의 변화 - 제도정치내 경쟁여건의 조성 - 복권, 3자회담, 선거법등의 정치관계법개정 ③ 헌법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②의 경우는 ③을 카드로 원내에서의 투쟁과 타협을 통해, ③의 경우에는 원내에서 안될 경우 민주협을 중심으로 한 장내외정치력을 총동원할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③의 경우에 서명, 집회등의 국민운동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타협이 결정적으로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경우에는 집권세력의 양보와 타협을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업모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대규모 대중집회등의 방식을 사용할 경우 민주화운동과 접맥되면 급격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는 이미 독재권력과 어느정도 공동이해를 갖고 있다. 운동권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벗어나는 전술적인 관계는 회피하려 할 것이다. 어쨌든 정치세력내 각 주체마저 상황을 정확히 예견할 수 없는 처지인만큼, 구체적인 윤곽의 파악에는 시간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양김씨의 재등장과 이들 중심의 야권정치력의 재편을 80년 서울의 봄과 같은 3김시대의 재도래로 보기에 강력한 독재권력이 엄존하고 있고, 독재권력과 이들 사이에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진전을 기대하기에는 장외정치세력의 제도권편입을 통한 기만적 의회주의의 강화와 분할지배전술의 고도화에 의해 민중적 쟁점과 제도순을 희석화시키려는 독재권력의 의도를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약간의 전망

70년대 후반이후 세계경제는 만성적인 경제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진강대국들은 자본축적메카니즘의 전환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함께, 불황의 부담을 독재정권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종속의 강화에 의해 제3세계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축적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제3세계 민중들의 민족해방운동이 심도를 더해가며 광범하게 발전해 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세계경제와 정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국은 세계전략의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79년 이후 에콰도르, 볼리비아(82), 아르헨티나(83), 우루과이(85.3.1), 브라질(85.3.15), 과테말라 등으로 이어지는 남미의 민정이양 도미노 현상은 바로 이러한 상황변화와 함께 미국의 세계지배전술변화와도 유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군사적 중요성(3각군사동맹의 추구하고 함께 NATO급으로 격상)의 중대, 동아시아지역의 점증하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무역과 자본투자 대상으로서의 한국의 중요성(8위의 무역상대국, 곡물과 무기수입의 4.5위)에 비추어 한국을 ‘사활적 이해 상관지역’(vital interested area)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음양으로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현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미 레이건행정부는 미국의 장

기적 이익의 관철을 위해 한국에 있어서도 정책의 일정한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리고 전두환의 4.24 방미에서도 한국내의 정치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0년의 모험을 겪은 미국의 보수세력은 가능한 근본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방지하면서 우선 현정권에 대해서는 평화적 정권교체와 단임의 준수 = 전두환의 퇴임을 기정사실화시키고, 견제세력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양김씨의 해금 등 부분적 정치적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합법적 테두리내에서의 권력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관철여부야 어쨌든 미국보수권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가 아닌한 민간인으로서의 권력이양에 의한 급격한 민중적, 민족적변화 가능성을 배제하려 할 것이며, 지배세력 내부의 인물교체와 함께 야권보수정치세력의 육성을 통해 독재권력과 민주화운동세력을 다같이 견제하고, 그들을 제도적인 틀내의 경쟁에 묶어 둘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것이다.

속단은 금물이겠지만 현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은 권력의 생리로 보아 그 기득권 위치를 기적으로 일단 평화적 정권교체를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고수위에서 지배세력내의 기만적인 인물교체 방식에 의한 군사독재의 영구화를 기도할 것이다. 반발이 거세질 경우에는 기만적 양보에 의해 무마하고, 권력의 기본 프로그램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남북대화등에 대한 대대적 선전전과 함께 각 부분의 차단과 학생운동등 핵심운동력의 제압위에 운동의 혼란 내지는 무기력 상태속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 할 것이고, 운동력의 결집을 저지하기 위해 정보정치의 강화에 의한 음성적, 부분적 탄압과 함께 분열 공작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양김씨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정치세력은 기존정치권내에 자기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구야, 구여등을 망라하는 광범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권력교체세력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해나가려 할 것이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발전하면 자기존립근거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타협과 투쟁의 줄타기를 해나갈 것이나,

그 타협의 선과 한계가 어디까지일지는 한국사회의 객관적 구조와 민중의 민주역량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단순한 권력과의 타협추구는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군사독재세력의 지배체제유지전략의 이용물로 전락되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확고한 민중·민족적 기초하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정치세력은 그를 위해 봉사할 때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타협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내의 대립과 투쟁은 정권교체기의 권력의 동요와 함께 광범한 정치적 열기와 격랑을 예고한다. 그간 강화돼 온 독재체제가 독재자의 자의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고 그 역도 마찬가지로이듯이, 정치적 조작과 타협, 즉 정치적 상부구조의 자율성은 하부구조에 의해 규제되고, 민주화운동과 민중의 민주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정치적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체제유지메카니즘의 강인성, 독재세력의 유연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정보의 범람과 현란한 상황전개 속에서 우리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다같이 경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사회구조의 양극화와 독점의 재편강화, 해외독점자본에의 종속성의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민중적 자유의 구속과 생존권의 박탈을 강화해 왔다고 할 때, 우리는 독재권력의 민중적 제스처뒤에 숨겨져 있는 음모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독재자가 빵과 자유를 민중에게 선물로 준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이 주목할 바는 권력교체기의 지배세력내부의 분열과 틀, 다양한 정치세력의 갈등과 정치적 공간의 확대를 가속적인 운동발전의 유리한 고지의 확보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에 있는바, 상황전개의 본질을 일관되게 직시함과 아울러 패배주의를 불식하고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는 총체적 운동내용의 제시와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 알림

「민주화의 길」 9호 발행일자가 늦어진 관계로 몇 편의 원고가 시기를 놓친 감이 있으나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해방의 그 날까지

채 광석지음

산야에 푸르른 새순들은 들고  
여기 저기 진달래는 진홍으로 타오르는데  
우리들 4월의 혼은 잠들 수 없다

온 몸을 들어 압제와 예속과 분단을 거부하고  
온 몸을 디밀어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 통일을 부르짖다가  
독재의 총칼에 쓰러져 민족의 혼으로 묻힌지 25년  
결코 잠들 수는 없었다  
우리들의 피로 얼룩진 4월의 그 벅찬 승리가  
하루 아침에 무자비한 군화발에 고꾸라지고  
예속과 독재와 분단의 갈퀴 그 모진 광풍이  
민중의 삶을 휩쓸고 거덜내는 이 땅에서  
차마 하루인들 편히 잠들 수는 없었다

어찌 잠들 수 있었으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신음을 끌어안고 전태일이 찾아오는데  
김상진이 김경숙이 김종태가 김태훈이 황정하가 박종만이  
줄지어 오는데 아 아 수백 수천의 피투성이 광주 영령들이  
통곡하며 통곡하며 무리지어 오는데

공공서점

대통령의 봄은 울시 08

어찌 잠들 수가 있었으랴  
어찌 잠들 수가 있으랴  
저임금 저급가 강제절거에 울부짖는 민중의 비명소리  
몽둥이 군화발 최루가스 공해병 산업재해 핵무기에  
자지러지는 민족의 산음소리 강산을 뒤덮는 데  
어찌 잠들 수가 있으랴

긴 긴 세월 하염없이 뜬 눈으로 헤메어야 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삼천리 방방골골 떠돌며  
올려라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을 올려라 민족이여  
통일의 깃발을 올려라 불길처럼 물길처럼  
산야에 푸르른 새순들은 돌아나고 진달래는 피는데  
이 땅은 그대들의 땅 우뚝 우뚝 제 발로 일어서서  
기쁨에 넘쳐 일하고 삼천만 더덩실 춤추며 어울리는  
너희들의 해방 우리들의 해방을 굳게 세우라  
피물은 몸둥이 피물은 하소연 피의 절규로 떠돌며 왔나니  
산 자여 답하라 민중이여 일어서라 일어서라 민족이여

그 날이 올 때까지 해방의 그 날까지  
우리는 잠들 수 없다  
하루인들 잠들 수 없다

# 80년 「서울의 봄」의 평가

**\* 편집자 註 :** 이 글은 민청련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80년 상황인식에 관한 하나의 문제 제기로서, 이 글을 매개로 운동권 내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 1. 서론

다시 5월이 왔다. 산야가 초록으로 빛나는 계절이 오면 그날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10만의 인파가 다시 눈에 어른거리고 그 당시 광주에서 타오른 피빛 항쟁의 처절한 함성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80년 5·17 쿠데타와 광주학살이후, 5월이 내뿜어 나가는 동안 우리의 운동은 좌절의 수렁에서 점차 헤어나와 5월 민주화 항쟁적전보다 절대량에 있어서 몇배 증가할만큼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운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운동의 분화와 내적 견해 차이도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의 방향, 조직의 편성, 연대의 방법을 둘러싸고 운동체들 내부, 운동체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 때로는 긴장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잔혹한 탄압에 맞서 오랜 세월을 외롭게 버티며 싸워야 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불굴의 신념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점이 때로는 자기집단의 견해의 관철 요구로 외화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우리의 운동수준이 만족스러운 단계까지 발전되지 못해서 논의 수준이 낮은 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체계화된 운동이론의 제시와 이에 대한 비판적 상호토론의 과정에 익숙하지 못함을 인정해야만 한다. 논리적이기보다도 때로 나타나는 감정적 대응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먼저, 논의를 과학적 근거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시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목표, 내용과 과정, 방법에 관해서, 즉 운동론에 관해서 각부분운동체에서 제기하는 논리를 충분히 토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야말로 서로의 친소관계나 정서적 융합만을 앞세우는 애매한 설득만으로는 도저히 각 운동력사이에 존재하는 견해 차이를 해소할 수 없는 단계까지 운동량은 팽창되어 있는 현실을 모든 활동가들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과학적 운동이론의 정립에 보다 열심이어야 한다.

80년 5월 민주화항쟁에 대한 반성과 평가작업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운동론의 정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출발점이다. 올바른 운동론, 즉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줄 운동이론은 80년 5월 민주화항쟁이 도달했던 위대한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결국 좌절로 끝나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5월 민주화항쟁의 평가를 제대로 해냈는가? 아니다. 오히려 5월 민주화항쟁을 되돌아보는 견해의 다양함에 놀라게 된다. 각자는 자기식으로 5월 민주화항쟁을 정리하고 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평가주체와 대상과의 대화라는 말이 있거니와 각자는 5월 민주화항쟁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상응하

는 운동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5월 민주화항쟁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그 평가주체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80년 5월 당시 각 세력집단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후에 어떻게 반성, 평가하는 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둘 점은 이 글은 당시 유신잔당의 반민중적 공세, 미국의 역할 등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은 제외했으며 5월 민주화항쟁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세력중에서 몇가지 전형적인 입장을 추출, 단순화하여 시론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점을 미리 전제하고 서술해보고자 한다.

## 2. 각 세력, 집단의 대응

앞서 지적했다시피 여기서는 민주세력들의 대응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민주세력이란 범주도 단순히 군사독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넓게 잡았다. 따라서 외압이나 민족통일의 문제, 민중생존권의 문제에 관해서 민주세력들 사이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 (1) 신민당과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정치세력

10·26 정변 이전에는 박정희와 유신체제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박정희가 암살되고 미국이 '민간정부에 의한 정치발전'(79년 11월 3일 밴스미국무장관 성명)을 약속하자 정권이 자신들에게 올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 아래 투쟁성을 버리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군부의 환심을 사려는 태도를 취하며 부분적으로만 최규하 과도정권을 비판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민당은 최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일정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얻어내지 못한 채 11월 13일 무조건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동교동측도 11월 24일 윤보선·함석헌선생 등의 재야인사들과 청년운동세력이 주도한 '통대에 의한 대통령선거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듯 양 김씨는 12·12폭거를 통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부의 실권을 탈취했을 때에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군부의 실권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민주화에 차질과 과욕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사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야, 종교단체 등이 김재규 구명운동을 벌일 때에도 아무런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고, 80년 봄 학생들이 계엄해제, 2원집정부제 개헌 반대, 최정권에 의한 개헌추도 반대, 조기총선실시,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했을 때에도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정치군부에게 개입할 구실을 주게 됨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점진적 개헌과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한 정권 획득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었고, 그것에

기대를 걸었다. 따라서 미국과 군부의 암묵적 지지가 진요하였다. 비록 군부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군부 전체와는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 ② 국민운동

당시 국민운동 기구로서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공동의장: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중앙집행위원장: 문익환)이 있었고, 여기에 일부 학생운동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민주청년협의회가 중요한 몫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국민연합은 유신체제 밑에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중, 재야정치인, 기독교 성직자, 해직교수, 문인, 해직기자, 제적학생 등이 결집된 운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합은 신민당보다 강경한 자세로 유신철폐를 외칠 수 있었다. 그러나 10·26 정변 이후 국민연합은 크게 점진주의 노선과 행동주의 노선으로 나뉘어져 내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점진주의 노선은 군부에게 개입구실을 주는 과격한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신민당의 입장과 유사하다. 차이는 신민당은 제도권 안에 있었으나, 국민운동의 점진주의 노선은 제도권의 부패와 무기력을 비판하고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운동을 보다 중요하게 보았다. 이들은 김대중씨가 80년 4월 초 신민당 입당을 포기선언하자, 확실한 구심점을 갖고 신당의 창당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은 5월의 학생가두시위가 군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그 대안으로 개헌에 뒤이어 오게 될 대통령 총선을 민주화를 위한 대회전으로 규정짓고 그에 대비하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 행동주의 노선은 최규하 정권을 앞세운 유신잔당과 정치군부에 의한 군부독재의 재구축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중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여 국민대중에게 이러한 음모를 폭로시키고 그들을 분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1960년 4·19 혁명과 79년 10월의 부·마 시민항쟁을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성공적 사례·운동의 전형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따라 79년 11월 24일 YWCA에서 "통대에 의한 대통령선거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고, 80년 봄에는 학생시위를 적극 찬성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운동의 성격을 보다 깊이 규명해 보자. 어느 운동체의 성격이란 걸로 내세우는 말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적 존재(조직기반)와 운동목표 및 방법(전략과 전술)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운동은 중간계층에 토대를 두며, 일반대중에 대한 선전력·설득력의 강화를 통해 전

진해 나가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군사독재에 의해 제도권 안에서 민족·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로가 분쇄되는 경우, 국민운동 주창자들은 국민운동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무대이며, 정권을 위해 기존의 정당에 들어가거나 혹은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형식적인 민주화만이 아니라 민중에게 알맹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자신의 진정한 운동목표로 삼는 활동가들이 국민운동을 전략단위로 삼았을 경우이다. 점진주의 이든 행동주의 이든 제 1차 단계의 운동목표를 기존 현실 정치인들의 집권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행동주의의 경우 4·19와 같은 형태로 학생시위가 민중을 합세시켜 독재정권의 타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운동체가 여러가지 이유로 정치권력을 담당할 수는 없게 된다.

군사독재가 아닌 민간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적 기본권(표현의 자유, 생존권 등)이 확보되기 때문에 기층민중의 역량이 비로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요컨대 先民主化(反군사정권)→민중역량 의 확대→내용적 민주화의 달성이, 상정된 기본구도이었다.

이러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비교적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중간계층(재야 정치인, 성직자, 지식인, 학생)을 주체로 전개해 나가되, 점진주의 노선은 재야정치인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행동주의 노선은 학생운동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끝으로, 이들은 외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군사독재정권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민의 반대와 저항을 받는 독재정권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할 "안정적 정권"으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대답이다. 그 예로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나 부마 항쟁의 10·26 정변을 든다. 따라서, 총선에 의하든 가두 대중시위에 의하든 독재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중의 지지와 합세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취하였다. 대중은 시위대열이 힘이 있어 보이면 합세하기 시작한다. 대중이 의식화·조직화되어야 합세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 준비론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③ 현장은

"기층민중이야말로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주체세력이다"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민중이 각성되고 조직화되었을 때에만, 민주화는 성취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가들은 민중 속에 들어가 민중역량을 발전시

키는 데에 매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성장되지 못했을 때 정치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중역량이 정치투쟁을 수행할 능력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역량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이 입장이었다. 따라서 80년 봄의 정치흐름에서 노동쟁의에 조금 관여한 이상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이 입장에서 5월의 투쟁은 대중역량의 성숙을 기다리지 않은 성급한 모험으로 비난되었다. 5월 15일의 이른바 "서울역의 회군"은 이 입장에 강한 영향을 받은 총학생회 회장단의 결정이었다.

### 3. 각 집단들의 반성과 그 후의 대응

#### ① 신민당과 그 주변에 포진한 민간정치 세력들

5월 항쟁은 군부 쿠데타를 유발시킨 자살행위였다.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다. 광주시태는 군부와 "과격시위자"들 양 측이 자제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였다. 그들은 집권을 위해서 군사독권에 강경하게 대결하는 자세를 갖추지만 결코 "관이 깨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광주시태의 거론은 핵폭탄……" 운운하는 발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② 국민운동

점진주의 노선은 ①과 비슷한 맥락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민주화 계획(이른바 Project Democracy)에 의해 민간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며 특히 2·12 총선은 국민의 승리로 저들의 퇴각이 시작된 기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주의 노선은 80년 5월의 좌절을 "서울역의 회군"에서 찾을 것이다. 광주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15일 이후 계속 단호한 시위를 벌였다면 합세하는 군중도 점차 늘어나 계엄군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민중의 승리가 획득될 수 있었을 것이라 평가이다. 그럴 경우 국민운동체가 직접 선두에 나서서 가두 대중을 지도해 냈더라면 4·19와 같은 승리가 왔을거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전체 민주화운동력과 활동가들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은 무책임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 입장에서도 현재의 국면은 군사독재권력이 주도권을 갖고 부여해준 "유화국면"이라기보다 군사정권과 외세, 독점자본사이의 분열로 민주세력이 공세를 취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본다. 그러므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위한 부분운동사이의 연대방식에 있어서도 부분운동단위의 독자성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강력한 투쟁성과 통일성을 갖는 연합체의 형태를 주장하게 된다. 즉 민주화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으므로 모든 부분운동이 강력한 정치

투쟁의 수행을 위해 통일적인 투쟁편제로 묶여져야 하는 것이다.

### ③ 현장은

80년 5월 투쟁이 대중조직 역량과 지도역량이 부재하는 가운데 운동역량의 파괴만을 가져온 무모한 시도였다는 평가로 이 입장은 대중역량이 성숙할 때까지 일상투쟁에 치중해야 한다는 단계론적 사고(일상투쟁을 통해 역량이 성숙되면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사고)와 준비론에 빠져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가 "전략적 방어기이면서도 전술적 공세"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점차 단계론적 사고와 대중추수주의를 극복해 나가게 되었다.

### 4.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하여

앞에서 국민운동과 현장을 대비시켰을 때 아마도 70년대의 치열한 논쟁점이었던 정치투쟁론을 쉽게 기억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80년 5월 투쟁에서 양자는 극단적으로 대립된 견해를 보이면서 분열된 채로 패배와 좌절을 맛보게 되고, 그 이후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논쟁과 함께 의견의 통일은 점점 요원해져만 갔다. 그 이후 투쟁력의 회복을 가장 신속하게 보였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양자의 논쟁은 운동선상에서의 역할분담과 역량배치의 문제로 좁혀지면서 이견의 접근을 상당히 이룩해내었다.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한 대로 아직도 혼미와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80년 5월 항쟁의 평가 작업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미숙하고 애매한 수준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보다 활발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 5월 민주화항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종속적 군사독재 체제의 본질에 관하여

종속적 군사독재체제는 외세, 독점자본(해외자본과 그것에 하청화돼 판독점 자본), 정치군부의 3자동맹에 의한 기층민중의 수탈체제이다. 이러한 수탈체제는 불안정하며 또 그 재생산구조상 정치적 물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적 물리력 행사의 강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현실의 모순이 현상적으로는 독재정권에 의한 「대국민 정치제도적 탄압」, 그에 따른 독재정권과 민주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적 갈등은 우리사회의 역사적 과제를 단순한 민간정부의 수립으로 보는 인식을 낳았으며, 이러한 인식은 독재정권과 미국 사이의 알력을 이용하여 현재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5월 민주화항쟁은 종속적 군사 독재체제가 정치군부만이 아니고, 군부 그것과 연계를 형성하는 외세, 그리고 군부의 억압적 체제하에 수탈체제를 관철시키는 독점자본임을 보여 주고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정치군부, 외세, 독점자본 사이의 갈등은 종속적 군사독재의 지배체제 내부의 부차적 의견차이에 불과하며, 이들은 결국 '공동운명체'임을 광주민중항쟁은 보여준다. 따라서, 반독재 민주화와 반외세 민족민주 사회 건설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 (2) 민족·민주 과제의 해결 주체는 민중이다.

종속적 군사독재체제에 의한 억압과 수탈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기층민중이며 이들이 광우항쟁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다. 이것은 대중노선의 견지를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투쟁과정에서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헌신적 중간계층과도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반독재, 반외세 투쟁을 위한 연합세력은 민중을 중심으로 하여 비타협적 중간계층과의 연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3)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민중항쟁은 결국 좌절로 끝났다.

따라서 조직운동이 요구된다. 대중노선의 발전과 심화에 기초하면서 군사독재권력의 야만적인 물리적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는 높은 규율을 가진 민중의 조직운동이 발전되어야 한다.

(4) 현재는 민중역량이 명백한 열세하에 있으므로 모든 활동은 민중역량 강화와 동조·지지기반의 확대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운동의 승리가 올 수 없음을 뜻한다. 앞으로도 몇차례의 탄압국면을 이겨내면서 역량이 성장해야 할 것이다.

(5) 민중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한 부분운동의 강화 후 연대의 구축이라는 단계론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각 부분운동의 힘이 미약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연대의 형식을 적용하여 반군사독재투쟁을 통한 성과를 각 부분운동의 강화에 활용하고, 또 각 부분운동의 강화를 반독재투쟁의 발전에 활용하는, 부분과 전체간의 역동적인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반독재투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부분운동권의 역량강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서도 아니된다. 이러한 점들 즉, 부분운동을 통일시킬 높은 수준의 조직운동이 아직 부재하다는 점과 부분운동의 역량강화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단시일 내에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보다 깊은 분석이 요청된다. 이른바 유화국면의 제 2기에서 어떻게 민주·민중 주체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와 합의, 그것이야말로 민주화 쟁취의 선결조건인 것이다.

# 임금동결정책하 노동운동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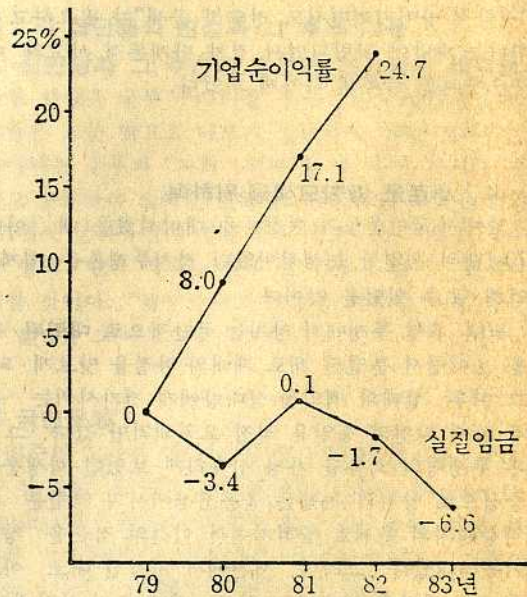
## 1. 현군사독재정권의 노동정책

현군사독재정권은 70년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성장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박정권에게서 물려받은 것 이상으로 경제를 대외중속화, 파행화시켰다. 80년대에 불어닥친 구조적불황이 극한상황에 이르자 현정권은 세 가지방향으로 불황을 타개하고자했다. 즉, I) 저임금저곡가, 체제강화에 의한 수출증대, II) 민간주도경제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위주금융정책시행, III) 미·일 독점자본의 추가적 이익보장—수입자유화, 자본금융시장 개방, 농산물수입개방 등이다. 이것은 노동자와 농민을 더욱 희생시켜 국내재벌과 미·일독점자본의 이익을 강화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이다. 따라서 현정권의 노동정책은 저임금체제를 강화하여 국내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왔다. 그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은 세가지 정책이다.

① 임금동결정책: 현정권은 안정기조하의 물가안정을 이룬다는 명분아래 공무원 임금동결을 시작으로 재벌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다. 현정권이 주장하는 임금동결의 이유는 대략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동남아 수출경쟁국들의 임금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로서는 임금인상은 곧 국제경쟁력저하로 나타난다. 둘째, 임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주도하여 안정기조를 파괴함으로써 사실상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된다. 셋째, 기업의 지속적유지발전을 위해서 항상 여유자금은 시설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하고 따라서 임금지불능력이 저하된다는 것 등이다.

위의 주장은 경제기획원, 전경련, 경영자총협회 등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허무맹랑한 사기에 불과하다. <표 1>에서 나타나듯 임금동결정책의 결과는 기업의 순이익을 증대시킨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대폭으로 감소시켜 버린 것이다. 국제경쟁력향상 허구적 물가안정(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않다.)의 결과, 지불할 돈이 없다고 임금체불, 임금인

<표 1> 실질임금과 기업순이익 비교표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상 동결을 한 실속이 표와 같이 기업가들의 급속한 순이익증가로 나타난 바에야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② 민주노조 파괴정책: '80년 5·17 이후 현정권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하여 오던 민주노조와 민주노동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기업사의 폭력수사, 순화교육, 구속, 폭행, 협박 등을 주무기로 12명의 산별위원장, 191명의 노조지부장, 상집간부, 대의원을 해고 또는 강제사포 처리하고 대표적인 민주노조들(청계, 반도상사, 서동, 태창, 원풍 등)을 탄압·해산시켜버렸다.

이러한 민주노조들에 대한 일대 탄압·만행은 임금동결정책하에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민주노동운동의 주요한 세력으로서 이들의 활동력을 크게 제약하기 위함이었다.

③ 노동법개악: '80년 12월 31일 현정권은 일체의 노동법을 개악하여 노동 3권을 제약하고 노조를 무력화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법개악의 요지는 첫째, 유니온숍제도로 노조의 단결권약화, 둘째, 노조설립요건강화로 신규노조설립방해, 어용노조 설립가능성 제공, 셋째, 3자개입금지조항을 신설해 노동자의 외부연대를 차단하는 한편 넷째, 단체행동권규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앞의 임금동결정책·민주노조파괴책의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제도적 폭력장치를 완비하여 민주노동운동을 영구히 말살하고자 하는 기도의 적나라한 표현이다.

결국 현정권의 노동정책의 요체는 저임금·저곡가정책을 강화하여 국내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생존권투쟁, 및 민주화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운동의 주체세력들을 물리력으로 압살하며 아울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정비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의 맥을 끊으려는 것이다.

## 2. 임금동결정책하의 생존권파괴양상

새로운 노동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파괴되는 양상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임금체불건수의 급증, 실질임금의 하락, 노동시간의 증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급증, 부당노동행위의 증가, 블랙리스트에 의한 노동운동가의 생존권위협 등이 그 주요한 형태이다.

<표 2> 연도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과 가계적자율 (단위: %)

연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1인당)	도시근로자 가계 소득중 저소득층 비중 (%)	가계적자율 (%)
1970	100.0	75.7	21.3
1975	100.0	68.9	31.1
1978	100.0	65.5	34.5
1979	100.0	62.4	37.6
1980	100.0	52.5	47.5
1981	100.0	51.4	48.6
1982	100.0	51.2	48.8
1983	100.0	50.5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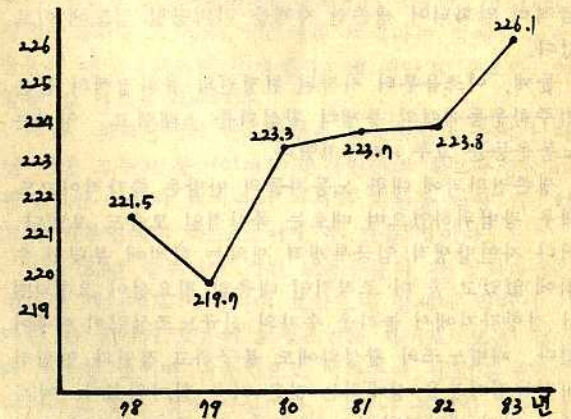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 『임금지침 1976~1981』,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표 1> 과 <표 2> 에서 나타나듯이 80년대에 들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하였고 그것은 가계

적자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다. 월급여 10만원이하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저임금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나마 83년부터 임금체불이 급증하여 34년 7월 현재 208억 원(해외 241억원)이 체불되어 예년의 50~6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임금의 하락과 임금체불의 증가는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노동자는 낮은 기본임금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계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고 연장근로는 실업자를 증가시키며 실업자의 증가는 더욱 저임금을 정착화시키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편 노동시간의 증가는 거의 비례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발생을 증가시켜 왔다. <표 3> 과 <표 4>는 이관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표 3> 월평균 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



자료: 동아일보, 83.10.31.

<표 4>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명)

연도	재해건수	재해자수			
		총수	사망	전체장해	부상
1973	58,485	59,367	640	—	58,327
1974	70,364	72,000	645	5,205	64,272
1975	79,819	80,570	1,006	6,490	73,074
1976	94,847	95,289	887	7,804	86,598
1977	117,077	118,011	1,174	11,336	105,501
1978	138,182	139,242	1,397	13,013	124,832
1979	128,457	130,307	1,537	17,257	111,513
1980	112,111	113,375	1,237	14,873	97,229
1981	116,698	117,938	1,295	14,806	101,837
1982	136,952	137,816	1,230	15,882	120,704
1983	—	—	1,452	—	152,500

자료: 노동부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것과 함께 기업가의 부당노동행위도 급격히 증가하여 해고, 임의 감원, 협박, 폭력행사가 잦아졌고 급기야 관과 협력하여 70년대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하였다.

제근로조건의 급격한 악화, 부당노동행위의 증가는 83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노동운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 3. 임금투쟁과 노동운동의 회복

83년 말 경부터 노동운동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임금투쟁적 성격을 띤 노동쟁의가 점증하였고, 84년 5월 이후에는 신규노조설립이 급증하며, 84년 말부터 노동법개정운동·최저임금제보장운동이 전개되는 등 양의 확대와 질의 발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는 기본적으로인의 변화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 노동자들의 경제적상태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생존권 자체를 파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

둘째, 이즈음부터 시작된 현정권의 유화정책의 틈은 민주화운동세력의 투쟁력 활성화를 초래했고 양자는 노동운동을 고무·자극하였다.

생존권파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고도 매우 광범위하였으며 때로는 폭발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임금투쟁적 쟁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고 좀 더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청되면서 경향각지에서 놀라운 수자의 신규노조설립이 이루어졌다. 개별노조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연합한 내외독점자본을 상대하는 것은 더욱 힘겨워졌다. 여기에서 정권, 재벌연합과의 싸움이 단초를 보였으며 그것이 「노동법개정투쟁」과「최저임금제확보투쟁」이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임금투쟁 또는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자연발생적 노동쟁의의 증가(83년말~84년상반기)

노동부의 통계에 의하면 84년 상반기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65건으로 되어 있다. (82년 88건, 83년 98건,) 그러나 사실은 질적으로나양적으로 실제적인 쟁의는 통계수자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시기의 노동쟁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 대다수의 경우 임금인상 및 임금체불청산을 요구하는 임금투쟁이었다.

형태면에서 파업·농성 시위를 중심으로 하는 격렬한 투쟁형태였다.

조직면에서 자연발생적·비조직적 투쟁이 주요형태였다.

연대면에서 현장참여 지식인 및 민주화운동세력과의

연대는 아직 소극적인 상태였다.

이시기의 노동쟁의는 자연발생적 임금투쟁이라고 정리될 수 있고 역사적 분류로 보아 노동운동의 초보적 형태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기의 임금투쟁이 거둔 성과는 대단하다. 이시기 임금투쟁은 노동운동전체의 투쟁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8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신규노조설립의 운동적형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운수노동자들의 폭발적 쟁의로서 84년 5~6월에 일어난 대구·부산 택시기사 파업·시위 투쟁은 전체 노동운동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전국의 운수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쳤던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택시기사 시위투쟁 이후 대구지방에 만도 51개의 운수 노조가 결성되었다. (대구 매일신문 7월 27일 보도) 운수노동자들의 조직화현상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주시가 필요할 것이다.

#### ② 신규노조결성의 폭발적 증가(84년 5월~84 하반기)

84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결성된 조합수는 무려 167개로서 아마도 우리역사상 드문 일로 기록될

<표5> 월별 신규노조 결성추세

월	조 직 수					계
	섬유	음식	화학	자동차	기타	
1				4	1	5
2		3	2	3		8
3	1	1	2	5	1	10
4	1	2		5		8
5	1	5	2	56		65
6	3	7	4	51	1	66
7	2	2	1	12		17
8			4	11		15
9	1	2	1			4
미확인		2	1			3
계	10	24	17	146	3	200

자료: 「들베끼」간, 「노동현실과 노동운동」

것이다. 또한 어용노조의 민주화과정도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상반기의 임금투쟁과정에서 투쟁성이 회복되어 노동운동 전반을 활성화시켰고, 둘째, 유화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 물리적탄압의 도가 약화되었고, 셋째, 현장참여지식인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활성화된 노력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자연발생적 임금투쟁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직역량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기간의 운동의 특징은 첫째, 자연발생적이 아닌 단위공장별 조직적 투쟁이며 운동력화된투쟁이고, 둘째, 근로기준법상의 세련리, 즉 광범위 한 근로조건 개선운을 주요한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고, 셋째, 노조설립에 대한 탄압에 대항하여 단결권 및 부당노동행위금지 요구도 폭넓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다.

따라서 요약하면 광범위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단위공장별 조직적 투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③ 노동법개정운동과 최저임금제보장운동(84년 하반기~85년 초)

전술한 두단계는 비록 시기적으로 매우 급속히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70년대 노동운동과 내용 및 형식의 면에서 대차를 보이지 않는다. 단위사업장별 노조형태와 경제투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80년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점은 정치투쟁화할 수 있는 중요문제를 부각시켰다는데 있는 것 같다. 노동법개정운동과 최저임금제보장운동이 그것이다.

84년 하반기 한국노협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의견을 모아 발의한 노동법개정운동은 현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I)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을 회복하고, II)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실시 등 근로기준법을 개정실시하며, III)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운동은 현정권의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나 담당주체의 설정, 지원세력의 자세 등 많은 현실적인 난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가지 예로 최근 노총과 몇 언론사에서 헌법정신에 기초한 노동법개정운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법개정운동의 본래적 취지는 단순한 법차원의 개정만이 아닌 실제적인 노동기본권과 부속제권리회복으로 자칫 왜곡되어 버릴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2·12 국회의원선거를 전후하여 제기된 최저임금제보장운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85년도 임금인상투쟁시기를 앞두고 제기 되어 매우 적절했던 것 같다.

이운동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최저임금부분에 대한 법적인 차원의 시행요구운동과 개별 단위조직 혹은 집단으로 기업주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최저임금확보투쟁으로 나뉘어 진다. 전자의 경우 법조문 자체에 강제시행성을 부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법개정운동의 일부분이고, 후자는 각 단위공장별로보편적 개념화된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이운동의 전개는 다음과 같은 운동적 토대를 건설할 것이다.

첫째, 단위사업장별 투쟁의 중심적 내용이 보편성을 갖으면서 고립분산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차 집단투쟁을 통해 횡적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둘째, 이 운동의 내용상 임금인상을 둘러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경제투쟁적 대중성을 갖으면서도 다수에 의해서 추진될 경우 현군사독재체제의 핵심을 공격하는 정치투쟁화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대중성확보와 투쟁성제고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저생계비 확보투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민중 모두의 문제이며 기본적인권의 확보투쟁이므로 광범위한 계층과 제기관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연대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83년 말부터 시작된 노동운동의 활성화과정은 편의상 세단계로 구별하여 보았으나 실제에 있어서 커다란 한 줄기의 흐름의 외적표현의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며 내용적으로 세부분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흐름의 방향이 분명하며 그것은 발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즉 내용면에서 군사독재체제의 근본을 공격하는 정치투쟁의 방향으로 형식면에서 점차 조직역량의 확대를 기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4. 임금인상투쟁사례 -대우자동차 경우-

올 봄 임금인상투쟁의 선봉에 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생산직 종업원 2,100명은 4월 1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파업 5일 만인 4월 19일 철야농성에 들어감으로써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한편 대우자동차 인천공장의 생산직노동자 200여명도 17일부터 동조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사무직종업원마저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사무직종업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우자동차는 최근 2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려 창업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생활은 생존권파괴의 상황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것이었다. 즉, 임금수준(기본급)은 노총발표 1인 최저생계비인 16만원 미만

< P. 42로 >

# TV 시청료 납부를 거부하자!

김태홍 (지도위원·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대표)

1980년 12월 1일 한국방송협회는 결의를 통해 5개 민간상업방송(동아방송, 동양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한국FM)을 흡수, 통합하고 오늘의 KBS의 터전을 마련했다.

통합의 이유는 상업TV의 영리추구와 상흔위주의 방송구조를 건전한 국민의식의 함양·개발을 향도하는 공공의 방송체제로 전환시켜 한국 방송계의 폐단을 없앤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공영방송의 정신인 공익성에 입각,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KBS는 81년 3월 7일 느닷없이 광고방송을 시작했다. 민간방송 인수 때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 530억원을 시청료 수입만으로는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얼마나 목적과 수단, 원칙과 방법을 뒤바꿔 놓은 억지 논리인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1천만대의 TV수상기가 보급되어 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에서부터 1975년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신문은 77%가 성장했고 라디오는 417% 성장한데 비해 TV는 3.235%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식인이나 사무직 종사자 및 일부 시민등 비교적 학력이 높고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이 신문을 보는데 비해 TV는 학력의 고하, 남녀의 성별, 빈부의 차이에 구애 받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TV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다.

광고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산물로서 기업의 영리추구, 상품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소비성향을 촉발하고 소비자의 판단능력을 마비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선진각국의 공영방송들은 국민민복의 증대를 위해 광고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BBC, 프랑스의 TFI, 일본의 NHK 등이 그 예이다.

방송 저널리즘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그 하나는 언론으로서의 위치와 기능의 문제이고 둘째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와 기능이다. 언론은 어떠한 이익집단으로부터도 독립

되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적기관이다. 따라서 언론자유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된 하나의 집단권리이며 근본적으로 국민에 속해 있는 것이지 언론기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TV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정신의 함양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민간 방송사를 통합하고 전파매체를 독점한 KBS의 방송제작, 보도 현황은 어떠한가?

KBS의 이원홍 전 사장은 『행사문화의 정착으로 국민사기의 진작에 앞장서자!』면서 『KBS는 한국의 행사문화를 발전,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 받고 있으며, 「국풍 81」「호국대행진」「풍년제」「도자기 축제」「도서시장」 등의 행사를 주관, 국민의 가슴 속에 행사문화에 대한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고 84년 9월 월례 조례회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공영 전파매체인 KBS는 시청자에게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건전한 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국민에게 균형 있고 건강한 오락물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

저녁 9시 뉴스시간이 시작된지 20분이 지나서야 국회뉴스를 방영한다든지 학생 시위의 본질은 은폐하고 이를 급진·과격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2천만 노동자·농민의 질곡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허구에 찬 성공사례 나열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84년 우리나라 농가 부채는 호당 2백만원, 총 4조원에 달하고 쌀 생산 농민은 가마당 2만원씩의 손해를 보고 84년 외국 농축산물의 도입은 19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농민파산의 상황에서 KBS는 84년 11월 12일 여의도 광장에서 「풍년제」를 벌이고 이를 대대적으로 방영했다.

천문학적인 외채와 수출부진, 불경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 중소기업의 휴폐업, 대기업의 부도, 사무직 근로자들의 강제저축, 기층민중의 생존권 박탈 등 탈출구가 없는 극한상황인데도 별거벗은 호화쇼, 사장·회장의 가족들만 범람하는 연속극과 각종 스포츠 중계만으로 화면이 채워지고 있다.

급기야는 KBS·MBC 두 공영방송이 지난 2·12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하자 관영방송으로 둔갑, MBC의 경우는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는 미니 드라마에서 「설사 저희 당이 지역구에서 모두 당선된다해도 전체 의석의 55% 밖에 안됩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KBS는 「85지역살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 여당 후보를 출연시켜 공공연한 불법선거행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에서는 시청율 결과에 따라 시청료를 배분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시청율이 떨어져 시청료 배분도 낮고 광고주도 않는다.

국영인 프랑스의 TFI TV에서는 매주 「수상자의 대화」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 프로 후에는 야당측에도 똑같은 시간의 프로를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방의회 선거 기간에는 방송심사 위원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 이 프로마저 중단시켰다.

그리고 일본 공영 NHK의 경우 전체 방영시간 중 뉴스 보도가 36.7%, 교육과 교양이 27.6%, 오락이 21.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보도	교양	오락
MBC	18	34	48
KBS 제 1 TV	21	32	47
KBS 제 2 TV	8	48	44

그러나 언론기본법 시행령은 보도 10%이상, 교양 40%이상, 오락 20%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C 제 1TV의 경우, 10% 선에 머물러도 좋을 보도쪽의 할애량이 두배 이상인 21%나 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정부 홍보를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40% 이상 되어야 할 교양부분이 32%, 20%에 머물러야 할 오락부분이 44%에 이르고 있어 오늘의 KBS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1980년 12월 19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종래의 방송광고제도를 뒤엎는 입법조치를 단행, 정부는 12월 31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공포 했으며 81년 1월 22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발족했다.

광고공사법 제 1조에는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체제를 정립하고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사업을 지원케 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언론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 이법 15조는 「국내 각 방송국은 공사가 대행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고 못박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주든지 TV나 라디오에 광고를 하려면 광고공사나 공사가 인정하는 대행사를 찾아가야 한다.

84년 우리나라의 총광고비는 7천억을 넘어섰다. 이

는 GNP의 1%선이다. 이중 광고공사를 거쳐 가는 몫이 40.4%, 따라서 공사는 2,670억원 어치의 광고를 팔아서 그 중 수수료 20%를 떼어 내고 경비를 제한 외에 379억원의 공익자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초과달성, 557억이 되었다.

공사가 81년부터 84년까지 조성한 공익자금은 1천억을 돌파했다. 공사는 이돈의 77%를 사회에 환원했다. 공사는 언론인 공익사업으로 언론인 해외시찰, 언론인 자녀 장학금 지급, 주택자금 융자, 생활자금 대부, 프레스 센터 건립, 양평 수련원 건립 등의 사업을 벌였고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는 예술의 전당 건립,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 출자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만 검토해 보자.

프레스 센터 건립으로 200억원을 투자했고 양평에 50억원을 투입, 11만 2천평의 부지 위에 86년까지 교육·숙박·가족휴양시설까지 들어서게 된다.

또 강남구 서초동 6만 8천평의 부지위에 87년까지 8백억원을 투입,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돈은 전국이 모금운동을 하느라 떠들썩 했던 독립기념관의 건립비가 5백억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은 대조가 될 줄 안다.

한국 문화진흥 출자라고 하니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은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한 회사인 「한국 문화진흥 주식회사」에 1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했다는 말이다. 광고공사는 세인의 눈을 의식해서 「한국문화진흥」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이권화된 골프업을 「언론공익」에 결부시키고 있다.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는 84년 1월 26일 회사설립 등기를 마치고 경기도 00지역에 1백만평의 부지를 선정, 땅을 매입 중인데 185억의 공사비를 들어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KBS, MBC,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사업단등 전파매체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들은 연간 3천억원에 가까운 광고판매액에 시청료 수입 1,255억원, 사업단·기타 수입 95억원 등의 방대한 자금을 국민적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임의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상품 소비를 통해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시청료를 제공, 역사의 진로를 오도시키고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의 홍보실 역할을 하는 KBS, MBC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각자가 이를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해 우리 안방의 돈을 꺼내가는 시청료 징수를 우선 거부해야 할 것이다. 광고문화는 우리가 하루 아침에 개선하기 어렵다치더라도 시청료는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동시적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여 국민의 비판·판단의식을 흐리게하고 독재정권의 비리를 은폐하는 방송 현실을 타파해 나가자.

# 전두환씨의 방미를 반대한다

## —미국은 과연 한국민중의 벗인가—

4월 9일 각 언론은 전두환씨의 방미일정이 4월24일부터 29일까지라고 발표하였다. 신문발표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미동반자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공동노력을 확인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간의 외교 및 안보협력의 강화를 다짐하게 될 것"이며 또 "양국간의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4월 9일, 동아)

외교적 수사와 형식적 내용으로 일관된 공식 발표문의 이면에 내포된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는 것은 실천의 중요한 초석을 이룬다.

이번 전두환씨의 방미는 미국측에 의해 '업무협의를 위한 공식방문' (Official Working Visit) 로 분류되고 있다. 이 형식은 미국의 국가원수급의 의전상 '사적(私的)방문'보다는 높지만 3급수준의 의전절차이다. 이러한 의전형식에서 이번 방미의 성격을 몇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입장에서 특별한 '현안'이 없다는 것이다. 즉 81년 2월 전두환씨의 방미 이후 진행된 한미관계정상에서, 미국의 새로운 차원의 전략적 요구는 없을 것이며 기존 정책의 '재확인'과 '구체화' 수준의 논의일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국의 위치가 '사활적 이해'가 얽힌 지역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역대정권은 취임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띤 국가들과 방문 초청의교를 전개해왔으며, 이미 서독, 영국, 일본수상이 레이건 재선 이후,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셋째,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는 반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추측된다. 언론에서는 '국제사회의 추세', '한미정상간의 친분을 고려한 행사마련으로 3급차원의 '업무협의를 위한 공식방문'의 형식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으나, 전정권의 대내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요청했음이 분명한 '공식만찬'과 '공동성명'이 거부된 것은 언론의 해석과는 다른 의미를 띠것같다.

최근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이번 방미에서 논의될 문제를 검토해보자.

첫째, 한·미·일 3각군사동맹의 구체화이다. 70년대말 이후의 국제정세를 소련의 남진, 팽창정책으로 간주한 레이건 정권은 「승전전략」을 목표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한정핵전쟁전략」과 통상무기를 중심으로 동맹국과의 공동작전을 상정한 「동시다발보복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시아·서태평양지역에서 보면 서태평양집단안보체제라는 장기적 구상아래 미일안보조약을 강화하고 한국을 "사활적 이해상관지역"으로 위치를 격상시켰다. 즉 미일안보조약을 축으로 한국을 대소방위의 "전진거점"으로, 일본을 "전선방위기지"로 하는 한미일군사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4월 2일 발표된 미국방성 85년군사력보고서에서 소련이 극동지역군을 강화, 동해를 주요작전해역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극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보다 증대할 것이다. 또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조성되던 중·소 화해 무드가 등소평에 의해 "회의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련의 정상회담 제의 수락과 함께 제안된 군축이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이전인 3월 19일에는 미상·하원이 MX 미사일경비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전략변경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극동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일 F16기 일본 배치에서 보듯이 레이건정권의 군확노선과 한·미·일 3각동맹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전두환씨의 방미에서 논의될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한·미, 한·일간의 군사협력문제를 구체적 내용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다. (헬기유출문제, 미군 경비부담문제)

둘째, 환태평양연대의 추진에 있어서 한국의 능동적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을 파트너로 한 환태평양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의도하고 있다. 미·일 경제에 구조적으로 예측된 한국경제를 기반으로, 전두환은 이러한 미·일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야합, 이미 '환태평양연대' '남남협력'을 주창한 바 있다. 이러한 미일의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하던 움직임이 랭군사건으로 잠시 정체했던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다시 한국의 역할이 논의될 것이다. 84년 9월 미국은 태평양협력위원회(PECC)를 설치하였고, 지난 1월 레이건·나카소네 회담에서 "태평양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제기된 바 있다. 이 회담직후

나카소네는 남태평양을 순방하였다. 그리고 2월 솔츠미국무장관은 태평양경제군사협력을 강조하였고, 4월 PECC 회의가 열리는 상황인 점에서도 이번 방미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이어서 전두환이 또다시 "아시아 태평양순방" "환태평양연대" 운운 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 3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긴장완화방안이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다. 레이건정권의 등장 이후 198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긴장완화의 움직임은 84년 1월 북한이 공식제안한 3자회담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 내용은 ① 미·북한사이에 평화협정체결 ② 미군철수 ③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 ④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반응은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월포워즈 84년 1월)는 것으로 거부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3자회담을 둘러싼 긴장완화의 전망은 '신중히 고려'하는 대상을 검토해봄으로써 예상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① 한국을 동등한 자격의 대화상대자로 인정하는가 ② 주한 미국 철수 문제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가 ③ 한반도의 CBM(긴장완화신뢰양성조치)의 구축에 응하는가의 문제이다. ①의 문제는 북한이 전정권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는가의 문제인데, 현재 남북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이 5월에 재개될 예정이므로 미국측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또 ①의 문제에는 의제의 한정문제가 존재하는데 북한측은 의제문제에 특별한 전제조건을 달고있지 않다. ②의 문제는 북한이 84년에 중국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하지않을 것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4. 9월 이시바시위원장에 대한 김일성의 발언) ③의 문제는 한미팀스피리트훈련에 참관단 파견문제와 남북이산가족 재회문제에의 협력으로 좁혀진다. 84년 10월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CBM을 3자회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산가족 재회문제는 5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산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유연한 제스처는 미국으로하여금 3자회담을 수락케하고 있다. 그러나 3자회담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이므로 남한측의 북방외교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아래에서는 한국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방미에서는 3자회담과 남북대화 문제가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활발한 남북대화의 제스처와 3자회담의 진전이 예상된다.

네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무역마찰과 관련이 있다. 80년대들어와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미국의 수입수요가 급격히 팽창한 반면 미국이외의 세계경제의 상대적 하락과 달러강세로 수출은 부진하여 83년 이후 무역역조는 심화일로에 있다. 84년 무역 적자폭은 1,23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국내고금리와 레이건행정부의 정치적 안정' 세계불황속에서 달러의 국제적 신용도의 상대적 우위에 힘입은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무역적자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의회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84년에는 통상관세법을 제정, 자국시장보호에서 상대국시장 개방요구로 전환하였다. 즉 미국로서는 수입은 줄이기 힘들므로 상대국 시장을 개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에 전개된 미일무역마찰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3월 19일 올린 웨딩턴 부차관이 방한, 미국의 요구를 다시 제시했고 미국의 수입 개방요구는 4월초 열린 한미경제협력위에서도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현정권은 국내독점자본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현 주미대사는 "대미수출량을 보다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품목을 검토해서 장래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다소간의 수입은 허용해야만 대미수출을 배가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그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주체는 전정권과 독점자본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번 전두환 방미는 민주화운동세력과 민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과연 미국은 현정권이 강변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요 '맹방'인가?

우리는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군이 장악한 상태에서 카터정권이 묵인 내지 방조한 80년의 광주학살극을 기억하고 있으며, 미국보수세력의 이기적 국익추구와 80년의 광주학살극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산미문화방화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사범으로 아직도 옥중에 있음을 알고 있다. 이번 방미는 전두환군사독재정권과 그 지원자인 레이건 보수정권이 벌이는 또 하나의 사기극이자 정치연극일 뿐이다.

4·19, 5·16, 5·17과 80년대의 경험속에서 우리는 이제 외압의 척결없이 민주화가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5월민중항쟁을 다시 맞는 시점에서 이번 전두환씨의 방미는 미행정부의 한국 민중에 대한 배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날 미국보수세력의 한반도에속화의 음모는 정치·군사·경제·외교의 모든 측면에서 노정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군사독재정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모든 음모는 명백히 거부되어야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미국 대외정책의 실체를 바로보고 전두환의 방미를 저지하자.

# 도시빈민 생존권 투쟁의 양상과 전망

## — 목동주민들의 투쟁에 관한 試論 —

### 1. 목동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84년 8월 27일 시작된 양화교점거농성부터 85년 3월 20일에 벌어진 목동 4거리에서의 치열한 싸움까지 7개월에 걸쳐 주민지도자 11명이 구속되고 100여차례의 시위를 통해 보여준 목동주민들의

즐거웠던 생존권투쟁은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71년 8월 서울에서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정착시켜 이루어진 광주대단지(현성남시) 주민 5만여명의 처절한 대규모 집단항거가, 도시빈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이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제임을 제기하게된 계기를 마련해주기는 하였지만, 운동으로써 확산·수렴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참담하게 패배한 이래 도시빈민들의 저항은 비조직적이고 일회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반민중적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과 회유, 협박에 굴하지않고 끊임없이 싸워 부상자만도 수백명에 이르는 목동주민들의 놀라운 지속적 투쟁력은 그 동안 도시적이고 피상적으로 인식되어왔던 도시빈민과 그 운동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투쟁속에서 의식이 발전하고 발전된 의식을 밑바탕으로하여 싸움이 심화되고 질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운동의 보편적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목동주민들의 투쟁은 몇차례에 걸친 기만적인 회유책과 함께 권력의 엄청난 힘앞에서 다시한번 패배할 것처럼 보인다. 과연 패배하고 말 것인가? 운동으로 성립된 힘은 일시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보다 더 큰 활동공간을 내재적으로 확보해나간다는 믿음위에서 일대위기에 처해있는 목동주민들 그리고 다른 재개발지역 도시빈민들의 생존권투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목동주민들의 투쟁을 중간정리해보고자 한다.

### 2. 목동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누구의 것인가

20년전인 64년 10월과 11월 서울시는 목동과 신

정동 지역의 시유지를 철거민들의 정착지로 지정하고 대방동, 대현동, 후암동, 해방촌, 남산, 영등포지역등에서 철거민을 청소차에 실어 강제이주시켰다. 겨울바람 드센 허허벌판 -당시는 서울시라고도 할수 없을 변두리 하천부지 8평위에 동화처럼 네개의 말뚝과 새끼줄로 금을 긋고, 천막을 치고, 움막을 파고, 이들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이 가진 것이라곤 오직 두손뿐. 전기도 물도 심지어는 변소조차 없는 곳에서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지를 만들어냈다. 관자로 만들어진 루핑집을 기와집으로 바꾸어가기까지 흘렸을 수많은 눈물과 땀 그리고 기쁨을 이들에게 어느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목동과 신정동의 주택은 단순한 재산이라기보다 서울시가 제공한 정착지 위에 20여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이며 가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마지막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없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 살아야한다던가. 마을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세, 월세 입주자들도 생겨났다. 오늘의 목동이 만들어진 것이다.

“목동주민들은 울고 있다”라는 팜플렛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전 재산인 가옥은 정부에서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취득세 및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여왔던 만큼 대한민국 법률로 정한 저희들의 사유재산인 것입니다.”

철거가 시작되면 값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들고 따라서 임대료의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가옥주들 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경제적 조건에 있는 세입자들이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생존의 한계적 상황을 무시하고 철거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 (현시가 약 900만원)과 이주비를 가옥주에게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물질 보상이 없는 허울좋은 개발계획을 세웠다. 83년 4월 12일 서울시는 강서구 목동, 신정동지역 140만평에 토지공

영개발방식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공영개발이라는 이름답게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위주의 서민용주택을 건립, 싼 값에 공급하여 10-1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되었으나 점차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폐기되고 채권입찰제까지 도입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대형아파트위주(전체의 85%)로 계획이 바뀌어 갔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84년 8월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서울시, 장삿속 아파트건설’ ‘장삿속에 밀려난 공영개발’이라고 그 내용을 폭로, 비판했고, 국회에서는 한 야당의원이 서울시가 목동지역에서만 1조원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시민의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투기군적 작태는 중단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토지공영개발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은 오직 신정동, 목동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만적 선전문구에 지나지않았던 것이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의 희생에 강권으로 모든 개발이익을 수탈하고 독차지하겠다는 독재 권력의 노골적인 반민중적인 속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존권투쟁이 생존 그 자체만을 위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참된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내적 근거가 주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대가능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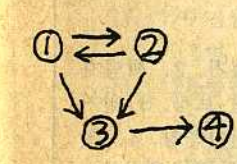
### 3. 싸움, 그 역동적 성격

목동에는 두 집단이 있다. 즉 가옥주와 세입자는 이해관계에 있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동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생존권투쟁속에서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확대, 심화되어갔는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일지 참조).

- ① 단계. 가옥주 중심의 투쟁.
- ② 단계. 세입자 중심의 투쟁.
- ③ 단계. 가옥주, 세입자 공동 투쟁.
- ④ 단계. 목동주민, 신정동 세입자 공동 투쟁.

각단계운동의 진행추이를 도표화하여 설명하면 ①의 투쟁과정에서 ②의 투쟁각성이 주어진다. ②의 투쟁각성이 ①의 투쟁을 새롭게 가열화하고 ③의 질적 변화투쟁으로 나아간다. ③의 투쟁속에서 ④라는 확대투쟁이 시작된다.

① 단계는 어용시비로 논란이 많았던 통반장 중심의 철거대책위원회가 해체되고 가옥주중심의 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주도한 84년 8월 27일의 양화교



점거농성시위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시위·항의 가운데 서울시는 가옥주들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을 감정가로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함을 언명했다.

② 단계는 10월 21일 세입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별도의 독자적인 대책위원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1월 22일 가옥주대책위와 함께 목동천주교회에서 주민대회가 열리기까지가 되겠다. 경찰의 방해로 주민대회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이 단계에서 민주화운동단체들 및 학생들이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목동에서 시위를 하는 등 일반 대중들에 대한 선전작업이 시작되었다.

③ 단계는 가옥주와 세입자들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격렬하게 생존권투쟁을 전개해나가는 단계로 그 이전까지 목동주변에서의 투쟁이 갖는 한계를 깨닫고 시정앞으로 진출하면서 시작된다. 부녀자 중심의 시위에서 탈피하여 청·장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거열기와 함께 구호 또한 반정부권력 차원으로 진전되면서 다양한 전술이 사용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권의 폭력은 극에 달하고 무차별한 연행과 무차별한 폭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현정권의 성격을 여의없이 노정하고 있다. 85년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의 시정앞 시위, 2월 11일 저녁의 목동 4거리 시위, 2월 12일부터의 공사저지철야농성 그리고 2월 23일 개편된 세입자대책위의 결정으로 열병합발전소 현장사무실에서 공사저지시위로 처음으로 구속자가 발생되었다. 3월 11일 신민당사를 방문하고 온 뒤 목동개발사업소 본부에서 농성중 경찰의 살인적 폭력으로 인해 목동전주민이 동원되어 투석전을 전개하고……싸움……직장에도 출근하지않고 어린이들이 학교가는 것조차 막으면서 싸움……농성, 항의……KBS……영등포로터리, 명동성당,……호소……서울대, 목요기도회, 여성대회……다시 싸움…….

결국 3월 17일 회유책으로서 서울시는 기만적인 목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세입자 지원방안 4개안을 발표했다.

④ 단계는 서울시의 세입자지원방안 발표 후 가옥주들이 강서구 부구청장을 목동내로 데리고 들어오면서부터 의욕적인 방화로 목동주민 지도자들이 대량구속되기 까지이다. 언론은 이 단계에서 군사독재정권의 한계적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왜곡보도를 통하여 권력을 측면 지원한다. 신시가지개발권내에 들어 있으나 아직 공사가 착수되고 있지않은 신정 1동 세입자들이 처음으로 참여하게된 대대적 시위이후 오늘까지 목동지역은 마치 계엄하를 방불케하는 경계와 간접적 통제로 주민들의 활동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그간의 투쟁을 통하여 1,000여명이상이 경찰서에 연행되고 많은 구속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심화과정을 거쳐 목동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이 기본적인 회유책과 엄청난 물리적 힘앞에서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인가? 그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참으로 그럴 것일까?

강권력을 동원하여 마지막 철거작업이 완료 되었다고 해서 목동문제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광주항쟁이 지난지 5년후 이지만 광주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생생히 되 살아 나고 있다는 점만을 보아도 목동문제는 보다 광범하게 보편적인 운동양상으로 확산되어갈 것을 우리는 믿는다.

#### 4.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동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민지도자들의 구속과 삼엄한 경비 그리고 언론의 대대적인 역선전 이후 목동주민들은 몹시 위축되어있기는 하다. 그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목동아파트 2차분양공고를 냈지만 3순위에도 그 신청이 50%이상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분양마감후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하고자하는 것이 권력의 속셈인 모양이다.

이러한 과정과 상황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당국의 두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이 참으로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 아닌 허구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야한다. 가옥주에게 150~200만원의 추가보상에 지나지않는 감정가보상이나 세입자지원방안 4개안중 택일하라는 대책은 기만에 지나지 않으며 빈민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기위해서 는

개발이익의 상당한 부분이 현지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둘째, 목동주민들의 생존권투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한 민주화운동단체들의 참된 연대활동 및 공동지원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카톨릭 및 기독교운동권에서의 지원활동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세입자대책 4개안등을 공동으로 분석해내고 공동대처하고자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등을 인정하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대활동 및 공동지원방안의 모색을 위해 목동주민 생존권투쟁 전반에 걸쳐 논의해볼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될 예정인 지역을 집중분석하고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야한다. 아울러 목동주민생존권투쟁이 가졌던 올바른 측면과 그렇지 못했던 측면을 분석해내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선전활동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새로운 도시빈민운동론이 정립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빈민이 생성되고 유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밝혀냄과 아울러 지금까지 일부에서 가져왔던 도시빈민의 성격에 대한 도식적 비판과 운동가능성에 대한 소극적 자세, 그리고 또 다른 일부에서의 민주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도시빈민운동의 적극적 모색이 행해져야할 것이다. 오늘의 빈민운동이 수동적 의미로서의 철거반대투쟁에 국한되어있는 점을 다같이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운동이 전개되어야할 방향, 그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적으로 점검하면서 재정립되어야할 것이다.

## 목동주민 투쟁일지

1984. 4. 12서울시 신정동 목동지역 140만평에 토지공영개발방식의 신시가지 조성계획 발표 (목동지역 철거대상자 가옥주 2,600세대 세입자 3,100세대 32,000여명)

1984. 8. 8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차분 분양. 개발지구 토지 평당 7-14만원 매입. 1차분공사비 평당 34만원 낙찰. 분양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당 105만원, 이상, 평당 134만원으로 책정 목동지역에 서만 1조원 이상 순익 예상.

8. 15 목동주민들 통반장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가옥주를 중심으로 목동지역 철거대책 추진위원회 결성.

요구사항. 1.선입주 후철거. 2. 세입자에게 입주권 보장. 3. 철거민에게는 원가분양. 4. 철거이주비 (50만원) 책정의 현실화.

8. 26 8월 27일 주민단합대회 개최기로 결정. 대책위원회들 경찰서연행, 주민 300여명 강서경찰서에서 새벽 2시 까지 농성. 대책위원들 석방.

8. 27 목동주민 1,000여명 오전 10시 20분경 안양천 뚝방에 모여 경과보고와 자유토론 후 12시경 양화교 진출, 오후 4시까지 양화교와 주변김포 가도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 경찰의 폭력에 의한 강제진압으로 연행자 및 부상자 다수 발생. 다시 오후 7시부터 12시 까지 주민들 1000여명이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목교에서 목동거리 쪽으로 가두 시위, 경찰의 무차별 구타로 다수 부상, 400여명 연행.

8. 28 안양천 뚝방과 목동지역에 100여 미터간격으로 경찰배치 주민 감시 및 외부인 통제

8. 30 목동아파트 분양접수 마감. 청약율 평균 3.8: 1, 45명형은 최고 20.1: 1

10. 17 오후 10시경 세입자 60여명이 목동천주교회에서 세입자 대책 논의

10. 19 주민들 200여명 강서구청에 집결 항의

10. 20 1통부터 24통까지 부분적인 철거

10. 21 세입자 대책위원회 결성

11. 8 12시경 주민 100여명 오목교에서 경찰과 대치. 오후 1시 30분경 사복경찰과 충돌 1명 심한 부상

11. 12 목동·신정동 세입자 400여명 강서구청에서 대책요구 농성

11. 14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입자에게도 입주권 줄것' '연행된 주민 2명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오목교 파출소앞에서 시위.

11. 15 주민들 400여명 오후 5시부터 강서구청에서 농성시작 50여명은 새벽 4시까지 철야농성.

11. 16 구청측의 대화거부로 주민들 200여명 오후 4시부터 구청에서 연좌 농성. 오후 9시 구청에서 목동 까지 가두시위

11. 17 주민들 400여명 오목교에서 시위, 주민 1명 경찰폭력으로 심한 부상

11. 12 목동천주교회에서 주민대회 개최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방해로 무산. 정사복 경찰 2,000명 이상 투입하여 외부 및 주민들 15명 연행. 오후 5시 학생들 목동 5거리 및 양평동에서 연합 시위

11. 24 오후 2시 주민 200여명 구청에서 직원들과 충돌, 주민 4명 부상, 병원으로 호송

12. 18 주민 500여명 안양천 뚝방에 집결 농성. 경인고속도로 차단 4회 23명 구로경찰서 연행. 주민 2명 구류 12일

1985. 1. 21 가옥주 대표 강서구청장에게 서울시장 면담 주선 요청 거절

1. 22 오전 11시 시청앞광장에서 80여명 연좌 농성. 11시 40분경 사복형사들에 의해 다수 연행되고 해산. 12시경 주민들 300여명 시청옆 종로입구에서 시위.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경 사복형사들에 의해 진압. 진압과정의 폭력으로 할머니 한 분이 실신하여 백차로 호송됐으며, 부인 한 분은 팔이 부러짐. 다수연행 되어 4개경찰서에 분리수용

1. 23 가옥주 150여명 목동개발사업소에서 서울시장 면담 요구 농성중 경찰과 충돌 38명 연행 2명 부상

1. 24 세입자대책위원회 구청에서 부시장 면담 부시장 앙케이트조사제의. 가옥주 150여명 서울시청에서 시장 면담요구. 거절당함. 경찰에 의해 강제귀가조치

1. 26 가옥주 300여명 시청앞 광장에서 농성. 187명 연행되어 5명구류 세입자들 500여명 시장의 구청방문소식에 구청으로 집결 150여명 연행

2. 3 주민들 영등포 여성 선거합동 유세장에 "우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유인물 배포.

2. 8 세입자들 김포공항의 김대중 선생 귀국 환영회에 플래카드 준비하고 유인물 배포

2. 9 가옥주 250여명 시청앞에 집결 시장면담요구. 경찰에 의해 강제귀가조치.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오후 3시경 목동개발사업소로 향하자 경찰병력 200여명 동원하여 강제 해산. 주민 4명 부상 32명 연행.

2. 11 오전 11시 가옥주와 세입자들 시청앞에 집결하였으나 강제귀가 조치. 500여명 연행. 저녁 9시경 주민 700여명과 경찰 700여명 대치.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부상자 발생. 임산부 심미경씨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군화발로 목뒤를 밟혀 두부를 16아늘이나 꺾어는 중상을 입고 다른 2명의 부상자와 함께 병원에 입원

2. 13 신시가지에 유수지 확장공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가옥주들 50여명씩 교대로 철야 농성. 3월 20일 경찰병력 대량투입 및 경제조치 강화하면서 강제 해산.

2. 25 오전 9시 주민 500여명 공사현장 사무실에 집결하여 "생존권 보장" "선 대책 후 철거" "공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 공사현장 직원과 충돌하여 부인 1명이

이 하혈하며 실신, 격분한 주민들 유리창 및 사무실 집기 파괴 경찰이 주민들을 연행하자 주민들 주변 공사현장 사무실의 유리창 및 서류를 불태움. 주민 40여명은 경인고속도로 점거(12시 30분~오후 1시까지)  
주민 이종훈(30세) 유명우(47세) 집시범으로 구속.

- 3. 1 세입자들 3 0여명 오후 2 시경 여의도에 서 호소문 배포하며 농성.
- 3. 8 세입자 대책위 산하에 구속자 석방 특별위원회 설치.
- 3. 11 오전 10시 주민 70여명 신민당사 방문 협조요청. 12시경 주민들 목동개발 사업소 사무실에서 소장 면담 요구 농성 경찰 농성 현장에 최루탄 투석후 사무실 봉쇄하여 주민들 질식 졸도하고 부상자 5명, 9명 병원 입원. 오후 7시 살인적 만행에 주민들 격분하여 경찰 1,000여명과 대치 충돌 투석전 및 새벽 3시까지 농성
- 3. 12 주민들 직장 출근 포기, 학생들의 등교도 못하게 했으나 늦게 학교에는 보냄. 오전 9시부터 주민 300여명 오목교근처에서 전경과 대치. 오후 3시까지 일대의 교통 마비.
- 3. 15 목동주민 500여명 신민당사 앞에서 연좌 농성. 12시경부터 영등포로터리까지 가두 시위
- 3. 16 주민 1,000여명 여의도 KBS별관 앞에서 사실 보도 요구하며 관영방송 규탄 농성. KBS진입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 귀가중 여의도 대교, 영등포로터리 오목교 도로 등을 점거하며 농성
- 3. 17 오전 10시경 가옥주 500여명 신민당사앞에서 시위  
세입자 500여명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 및 가두 시위
- 3. 18 서울시 세입자 이주 지원방안 4개 항을 발표. 4개안중 1안을 선택요구. 오후 2

시 주민 700여명 세입자대회 개최. 4개항에 대한 강한 의구심 표시  
지원방안 4개항

- ①단지내 임대 아파트(방 1개) 입주권 부여
- ②이주보조금 지급
- ③지방이주-보조비 우선지급
- ④차력단지조성 이주
- 3. 19 오전 11시 주민들과 회합하고 나오는 강서구 부구청장에게 가옥주 50여 명이 "당신은 목동사정을 너무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왜 싸우는지 직접보여주겠다"며 목동지역 안으로 데리고 가서 주민들의 실태 및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호소. 언론기관에서는 인질이라고 왜곡 보도
- 3. 20 주민들 경찰과 대치상태에 들어감. 경찰 10개 중대의 병력을 동원하여 목동 신정동지역을 점거 포위 형태를 취함. 주민들간의 교류 및 집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지역전체에 공포분위기 조성. 서울대에서 주민학생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주민의 경과보고 주민 2명 연행. 오후 6시 30분경 오목교 부근에서 학생 600여명 시위. 신정 목동주민 1,000여명 오후 7시부터 12시경까지 학생들과 합세하여 격렬한 시위, 저녁 10시 30분경 신원미상의 청년 10여명 신정 3동 소재 한국전업 현장 사무실에 방화, 전소.
- 3. 21 전일의 시위주동자 구속방침 발표. 집단행동 및 방화혐의로 주민 16명 연행. 주민들 한국전업 현장사무실 방화는 경찰측의 조작극이라고 주장
- 3. 28 목동 아파트 2차분 7820세대 분양 공고 4월 17일 분양 신청 마감  
연금 및 방화사건으로 금일현재 목동주민 구속 11명 수배 1명.
- 3. 29 오후 6시 40분경 영등포성문밖교회에서 기도회 개최. 참석을 저지당한 학생 300여명 영등포에서 시위 20여명 연행

## 민주·통일민중 운동연합 결성

민주운동단체 대표들은 3월 29일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의 통합대회를 갖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장 문익환목사)

을 결성했다.

민통련은 통합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외세가 강요한 것임을 밝히고 "지난 40년동안 반민족적 지배 세력은 이분단을 이용하여 '안보논리'를 조작, 민중의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악용했으며 이러한 양립된 개념이 아니라 포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과제" 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 민청연 4차총회 85년 사업방향보고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제 4차 총회가 3월 21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민청연은 사임한 이명준 부의장의 후임으로 최민화 운영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선출하고 김근태 의장으로부터 85

년 민청연 사업방향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또한 총회는 목동주민 투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목동문제연대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최민화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새로 임명된 집행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간부들의 신임 인사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4차총회에 즈음한 결의문을 채택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 의 문

#### — 4차 총회에 즈음하여 —

12·12 쿠데타, 5·17 광주사태로 이어져온 정치군부의 야만성이 민중의 각성과 정치적 열기의 고양으로 선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부정부패, 무능력 정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족경제와 민중삶의 어려움은 물론 재벌경제에 조차 심대한 부담과 장애를 조성해냈을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민중적 지지기반이 결정적으로 취약한 군부는 내부의 진통과 갈등은 물론 외압에 대한 종속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전두환씨의 방미로 연결되고 있다. 더구나 외채의 누증, 수출과 성장감소 등의 위기는 이제 군사독재세력에 의해서는 절대로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우와 럭키금성의 동요, 해운, 건설회사의 몰락등으로 재벌 내부에서 조차 대중적 신임에 기초한 민간정부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비명이 솟구치고 있다. (중략)

지금은 민주, 민주운동 세력인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민주화, 민중의 가난과 소외극복 민족의 자주라는 대의의 성취과정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한국민족사회의 지배세력인 정치군부, 국내의 독점자본, 외세의 내부에서 또한 상호간에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민주화달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신민당 내부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안일한 태도를 중시하며 이를 비판하고 때때로 반대하여야 한다. 광주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 대통령 직선제 등을 '핵폭탄' 운운하며 기피하는 태도와 발언은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이며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민중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책임회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도록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자.

선거과정에서의 민중의 승리를 전면적으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중, 민주주체세력의 발전을 등한시하고 승리감에 젖어 치열성을 둔화시키는 운동 분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반대로 관념적 장 이론에 빠져 준비론으로는 몰락될 수도 있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중 삶의 고통의 가중과 민중생활투쟁의 치열화 앞에 우리는 모두 옷깃을 여미면서 운동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부분운동 상호간의 작은 차별성을 해소시켜 나가는 결단을 하여야 한다.

장성광부와 가족들의 대규모 항의시위, 유니전, 경동산업, 진도, 특히 성원제강 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눈물겨운 항쟁에, 목동 신정동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중심점을 세워놓고 운동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돌아오는 5월, 피맺힌 광주를 위해, 죽음을 당한 광주시민들의 떠도는 영혼을 위해, 우리 모두의 비원을 위해, 광주사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 요구투쟁을 온몸으로 해 나아가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민주화 열망 실현을 위해, 민중삶의 고통과 소외의 극복을 위해, 민족사회의 비극을 방지하고 민족경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현 군사독재집단은 마땅히 물러가야 한다. 민주화운동세력은 민주화 투쟁일정을 올바르게 합의해내고 이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으로 편성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2. 기층 대중의 생활요구 투쟁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정치 사회화시켜 능률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운동의 전개는 반드시 민중영량 발전으로 귀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5월항쟁과 광주시민의 분노는 우리 운동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광주에서부터이고 모든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광주로 통한다.

#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대회」

## 노동자·시민·학생 2천명 격렬한 시위 청계피복노조 인정·노동악법 개정등 요구

4월 12일 오후 1시, 청계피복노조원과 대학생, 시민 등 2천여명이 서울 중구 신당동과 약수동 일대에서 「청계피복노조합법성쟁취를 위한 노동운동 탄압규탄대회」를 열고 청계피복노조인정, 노동 3권보장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에 걸쳐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낮 1시에 청계 6가 평화시장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회가 미리 배치된 전투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자 신당전철역 주위에 모여 청계피복노조원들의 「청계노조 인정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란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신당동 사거리에서 한양공고앞을 거쳐 평화시장쪽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무차별 발사하며 저지하자 투석으로 강력히 맞섰다.

경찰의 저지를 받아 더이상 전진할 수 없게된 시위대는 약수동쪽으로 방향을 바꿔 「청계노조 인정하라」 「노동악법 개정하라」 「시민생계 보장하라」 「매국 방미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시위대 중 몇몇 노동자, 학생들은 연도에 모인 시민들에게 청계노조의 정당성과 현정권의 노동운동탄압,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시민생활 등에 관해 즉석 가두연설을 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낮 2시경 동호로밀 사거리에 이른 시위대는 이날 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 청계피복노조의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었음을 선언하고 자진 해산할 것을 결의, 「청계피복노조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해산했다.

청계피복노조는 5·17후 부당하게 해산당하자, 지난해 4월 8일 「청계노조 복구대회」를 갖고 「평화시장 일대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새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현정권에 의해 계속 탄압을 받자 청계피복노조는 지난해 9월 19일과 10월 12일 두차례에 걸쳐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쟁취대회」를 열고 「노동악법 개정」과 「청계피복노조 인정」등을 주장하는 등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 타오르는 노동운동의 열기!

금년들어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신규노동조합 결성을 둘러싼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해태제과, 한일스텐텐스등에서는 어용노조의 민주화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4월의 임금인상시기를 맞이하여 대우자동차등 각 사업장에서 생존을 위한 임금인상투쟁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잔업거부 등 준법투쟁의 단계를 넘어서 장성광업소, 대우자동차, 삼성제약 등에서 전면 파업을 벌이며 단결권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현 정권은 경찰, 행정관청, 기업주와 결탁하여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 대우자동차노동자 파업투쟁 승리

전국 8백만 노동자들의 지대한 관심과 열렬한 지원 속에 지난 16일부터 「18.7%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농성 투쟁을 벌였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노동자들은, 투쟁 10일째인 25일 노동자들의 강철같은 단결력

을 바탕으로, 회사측과의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회사측은 기본급 5.7% 인상을 주장했으나 합의된 내용을 보면 기본급 인상 8%, 호봉인상 4.3%, 제수당신설 4.1%, 6~7월에 생산장려금 기본급의 50% 지급등으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상당한 부분 관철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협상대표로 선정된 홍영표씨(노조 대의원)와 김우중 대우회장의 협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25일 농성 근로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여기로 결정하고 농성을 풀었다.

지난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10명으로 된 「파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지도부, 홍보부, 후생지원부를 두었다. 이어서 대우자동차 인천공장(16일)과 부산공장(17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조하고 사무직 종업원마저 회사의 악랄한 임금착취에 항의하여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사무직 종업원 일동'의 이름으로 생산직 종업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회사측은 파업노동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회유·협박하고 시골집에 연락하여 부모를 올라오게 하는 등 파업파괴책동을 노골화해 갔다.

토요일인 19일 노동자들은 회사측의 파업파괴책동과 휴업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저녁, 많은 조합원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된 가운데 350여명이 공장내의 기술연구센터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20일과 21일에는 농성장에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1백여명의 노동자들이 관리직 사원 및 전투경찰의 삼엄한 저지망을 뚫고 농성에 합류함으로써 농성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21일 저녁부터 대폭증원된 경찰병력이 식사의 반입을 막자 조합원과 가족 200여명이 정문근처에서 시위를 벌였고 청계 4거리에서는 다음날 새벽까지 진압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또 22일에는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에 합류코자 정문에 집결, 스크럼을 짜고 1천 5백여명의 전투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임으로써 이번 투쟁이 모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열렬한 참여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했다. 그리고 22일과 23일에는 대우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인천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하여 24일 마침내 노사간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 〈협진화섬〉

지난해 12월 15일 성남의 봉제공장 중 최초로 노조

결성.

이후 노조는 작업장 내에서의 욕설, 폭행을 없애고, 작년엔 지급되지 않은 추석 상여금 50%를 지난 1일 받아내고 견습공초임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올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회사측은 위원장을 매수, 회유하여 위원장은 1달간 병가를 내고 잠적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직 부대리로 되어 위원장교체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 었다. 그러나 4월 4일 회사전무 자가용을 타고 나타난 위원장은 자기측 임원에게 위원장을 넘겨줘 총회를 소집, 어용노조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이 불법총회소집에 반대하는 민주 노조측이 총회반대시위를 벌이며, 회사통근버스로 조합원들을 퇴근시켜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회사측의 만행을 규탄했다.

한편 4월 2일 서울대학생 250여명은 협진화섬 어용노조회책에 항의하며 성남시내에서 켈불시위를 벌였다.

### 〈한국음향주식회사〉

한국음향주식회사 노동자 18명(해고자 7명)은 4월 9일부터 민주협사무실에서 「부당해고 철회」 「신고필증 즉각교부」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3월 24일 1차노조결성식을 개최, 노조를 결성했으나 서류상의 미비점 때문에 4월 1일 다시 노조결성대회를 개최.

그러나 신고필증교부가 이유없이 늦어지고, 회사는 열성적인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시키자 민주협에 서농성한 것이다.

이들은 10일부터는 단식농성 중이었는데, 14일 밤 민주협과 회사측이 노조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한 후 자진 해산했다.

한편 한국금속노조 산하 단위노조대표 40여명은 15일부터 노총회관에서 「노동부는 한국음향노조 설립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16일 한국노총측이 노동부와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약속, 자진해산.

### 〈한일스텐〉

3월 16일 조합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에서 어용노조 위원장을 몰아내고 손울선씨를 새지부장으로 선출.

앞으로 대의원 선거 및 노조 임원선출 후, 본격적으로 Q.C.조회시간에 대한 미불임금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이 회사 노동자 서기화씨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Q.C. 및 조회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내, 앞으로의 투쟁에서도 승리가 예상된다.

### 〈삼도물산〉

작년 9월 노조를 결성했으나 회사측이 위원장을 매수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탈퇴를 종용하였다. 이에 지난 11월 80여조합원들이 노조정상추진위를 구성하고 회사측의 부서이동, 해고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하였다.

3월 15일 쟁의부장(임양례)은 위원장앞으로 「임시 총회 소집 촉구서」를 발송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며 투쟁하여 16일,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조합탈퇴강요, 노조간부비방등을 계속하여, 조합원들은 3월 21일 회사식당에서, 해고자들은 지난 9일부터 15일 현재까지 세화상사 해고자들과 함께 신민당 박찬중의원 사무실에서 「부당해고 철회」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이다.

### 〈세화상사〉

2월 1일 노조결성대회.

그러나 회사측이 결성대회참석자를 매수, 회유하여 구청에서 설립신고서 반려.

2월 28일 해고된 노조임원 7명은 복직 투쟁 끝에 3월 14일 노동부로부터 복직통보를 받고 출근했으나 회사측은「너희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로 내쫓았다.

3월 19일 회사측은 화학연맹과 야합하여 어용노조를 결성.

해고자들은 3월 20일 구청사회과장 책상에서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던 노동자들을 「불온한 야학에 다니는 불순한 자들」이라며 「건전한 노조설립을 유도」하라는 어용노조설립을 지시하는 공문발송.

또 노동부는 세화상사 해고자들의 명단을 적은 블랙리스트를 부산시내 각 회사에 돌리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4월 15일 세화상사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조정상추진위를 만들고, 부산 삼도물산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박찬중의원 사무실에서 「어용노조반대」「해고자복직」을 주장하며 농성중.

### 〈해태제과〉

지난해 11월 자기측 대의원만을 단일 후보로 내세워 무투표 당선시켰던 어용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이같은 부정선거에 강력히 반발하자 이번에는 이들만을 단일 후보로 하여 찬반투표를 실시, 불법적으로 노조를 장악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3월 9일「해태제과노조 민주화추진위」를 구성하고 소식지「영터리 위원장 정상용을 폭

로한다」등을 배포하며 투쟁중.

3월이 지나도록 임금인상에 대해 물어봐도 없는 어용지부장에 대해 4월 19일 10시 문래동 남부지법에서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열릴예정.

### 〈롯데제과〉

지난 3월 어용노조위원장 소진오에 반대 하던 장혜숙 여성부장이 회사측과 야합한 노조의 음모로 부당해고된 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회사측은 얼마 남지않은대의원선거에서,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짚듣는 남자대의원을 뽑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 〈일신통신기기〉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자 회사는 전종업원 120명을 해고.

1월 15일 이에 항의하여 93명 농성.

### 〈영창악기〉

2월 26일 대의원 3명이 1) 기본금 13만원 2) 20%임금인상 3) 노조 임금교섭과 정공개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서명운동을 벌임

노조는 조합원들의 건의서를 받지않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대의원등 4명은 회사측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어 현재 회사앞에서 해고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2월 27·28일에는 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건의서 내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한영알미늄〉

조합원들은 어용노조집행부에 대해 임금 인상단체교섭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투쟁하여 노조측으로부터 1)일당 4,700원 확보 노력 2) 단체교섭결과보고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노조측은 회사와 야합하여 부서이동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이에 대항하여 투쟁.

### 〈성도섬유〉

정당한 노동절행사에 참석했다고 회사측의 감시, 미행을 당하던 여성노동자 3명이 4월 6일 회사식당에서 「부당해고 반대」 및 「기본급 10만원 보장,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요구하다가 회사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들 3명을 포함, 해고된 여성노동자 4명은 지난 8일 해고에 반대, 회사에 출근하려다 간부사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행주산성으로 끌려다니는 등 온갖 수모를 당했다.

### 〈한국케이·엠〉

지난 2월 15일 노조결성

2월 16일부터 회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윤경근, 김동남 등을 불법해고.

먹고 살 수조차 없는 낮은임금(생산직 초임 7만원 5년근속 12만원)을 주고 있는 악랄한 회사는 노조까지도 강제로 해산시켰다.

### 〈동일제강〉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던 노동자 7명이 부당해고 또는 부서이동을 당했다.

이에 대해 해고자들은 「해고자소식」(4월 4일 2호)을 배포하며 투쟁중.

### 〈대일산업〉

3월 4일 JOC 회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이순이, 박해숙은 해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며 복직투쟁을 전개 3월 15일 복직되었다.

### 〈경동산업〉

지난 1월 노조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해고시키고 어용노조를 결성한 경동산업은 4월 16일 아침에도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에 출근하려는 해고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 〈성원제강〉

지난달 3일 노조결성대회 구로구청은 특별한 사유없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한편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회사측은 노조결성대회도 치르지 않은 채, 어용노조를 설립.

4월 16일 노조설립과 관련 6명 해고 12명 강제사표.

## 회사강권 피만고추농사 망쳐

### 불량종자 피해농민 120여명 농성

경남 진양군내 10개부락 피만고추 재배농가 농민 120여명은 3월 21일 밤 상경하여 흥농종묘(주) 본관건물에서 이 회사의 피만고추(흥농에이스)를 재배하였다가 2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이의 보상을 요구 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민들에 따르면 회사측의 강권에 의해 재배한 피만고추가 결실기간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실이 되지 않거나 열매가 열리더라도 손가락 한마디만한 것 2~3개 정도여서 비닐하우스 150평당 274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피해농민들은 3월 29일에도 농성을 벌여 결국 30일 회사측과 비닐하우스 1동당 100만원씩 지원 반기로 합의했다.

한편 피해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에 대해 경찰 및 군청직원은 상경하려는 농민들을 진양에서부터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였으며 서울도착직후에도 농민 1명을 불법연행, 2시간이나 조사를 하는 등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농민들을 격분시켰다.

**광주사태의 진상을 밝혀라!**

**학살 책임자를 처단하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전두환 정권은 퇴진하라!**

**미국정부는 광주학살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 신민당은 총선공약을 지켜라

## 광주사태 진상규명은 어디로 갔나

“신당바람”, “둘개바람” 등으로 요약되는 2·12 국회의원선거는 말 그대로 바람을 탄 선거이다. 이 바람은 선거후에 기존의 정치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 바람은 기층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주로 도시 중산층을 통해 표출되었고, 안정과 화해라는 개혁주도 세력의 퇴색된 기치 아래 의도적으로 피조된 들러리 야당을 와해시켰고, 나아가 민정당이 아직도 제5공화국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꼽고 있는 다당제를 무너뜨렸다. 독재자들의 상용수법인 분리통치수단을 무너뜨린 이러한 민주화에 대한 열기를 입법부의 기능보다 통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국회를 일단 독재자의 시너로부터 구출해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가능성뿐이다. 이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질적 비약이 일어나야 한다.

기층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가? 기층민중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갖은 악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억압의 망을 뚫고 이러한 바람은 노동 현장, 농촌지역, 도시 빈민촌 등지에서 생존권 투쟁으로 표출되었고, 공개운동 단체의 치열한 정치이슈화와 조직적 지원 투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선거를 통해 전민중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이 민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열기의 샘이다. 이 근본원인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될 때, 질적 비약은 일어날 것이다.

### I. 애매해지는 신민당의 자세

매국 방미로 칭해지는 전두환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벌였던 신민당과 민정당의 정치협상 주제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①구속자(양심수)전원 석방 ② 김대중씨 사면·복권.

민정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① 민정당을 대표하는 노태우씨는 5·17 이후 양심법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부산 미문화원 방화살인범이 양심수인가?”라고 되물고 있다. ② 김대중씨의 사면·복권은 제 5공화국의 정당성·정통성과 직결된 문제

이므로 이에 도전하는 사태는 용납할 수 없고, 김대중씨는 광주사태의 배후 조정자로서 유죄를 인정해야만 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사면·복권이 되기 위해서 당사자는 자숙하고, 개전의 정을 보여주고, 통치권자의 아량을 요청해야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묵인 하에 2천여 광주시민을 살육한 군사독재집단의 대리인인 민정당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국민으로부터 통치집단으로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기방어 본능일 것이다.

문제는 이에 맞서는 신민당이다. 5·17 이후 정도에 있어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현 군사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이었던 신민당의 자세와 나아가 소수 정치군인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민족부정이라는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문제이다. 만약 신민당이 80년 이전과 같이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노릇을 했던 보수정권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민정당과 적절히 타협하여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며 각자의 당리를 취한다면 2·12 부정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민주주의는 물론 민족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위기를 동맹국에 전가시키는 미국의 팽창주의적 이기주의(일례로 한반도의 핵 불모화), 이러한 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 동맹국의 민중의 생존권을 희생시켜야 하는 미국의 거

대 독점자본 및 그와 손잡은 국내 매관독점자본의 반민중성, 이들 매관 독점자본을 물적 토대로 하여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자청하여 떠맡고 있는 군사독재집단의 반민중성·반민주성 등에 대항하여 여러 형태로 투쟁하다 구속된 인사들이 국회개원을 위한 정치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신문에 따라 혹은 뒤집어 씌워진 죄명에 따라 선별되어야 하는가? 물음 자체가 잘못이다. 정당의 테이블에서 오고갈 물음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묻고 대답해야만 할 문제이다. 적어도 민족의 위기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암살하여 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서슴없이 박탈하는 동족살인 집단에 동조하지 않는 한국인이라면 민주구속인사 전

원 측각 석방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민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몇가지 사건들은 “혹시”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첫째, 생존권투쟁을 하는 인사들의 신민당 방문이 외면당했던 사건과, 당간부들이 신민당 총재를 면담하기 위해 찾아온 양심수 가족들에게 “선동하지 말라”라는 등의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작태를 들 수 있다. 이런 태도가 과연 2·12국회의원선거에서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를 수렴하겠다는 자세이고, 선거기간 동안 민한당과 선명성 논쟁을 그렇게 치열하게 벌였던 장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시간은 우리편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편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편을 지칭하리라 믿는다. 군사독재를 괴멸시킬 수 있고, 민중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를 수립할 수 있으며, 민족의 자존을 확립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세워놓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우리편이라 주장하는 것은 기회주의로 선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예속매관독점자본의 거대한 물력, 강화되지만 하는 경찰의 물리력, 군사독재의 동족살인집단을 선진조국창조의 역군으로 미화할 수 있는 관제언론, 이를 지지 내지 묵인해주는 미행정부와 미국의 거대 독점자본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군사독재집단을 상대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집단을 곤경에 몰아 넣을 수 있는 대의명분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원칙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위에서 활동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며 전민중의 힘을 모아 현 군사독재집단에 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상 힘의 구심력에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세력은 흡수될 것이다.

세째, 광주시민항쟁이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 발발했다는 것도 넌센스이지만, 누구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넌센스이다. 이 항쟁은 1980년에 한반도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민중의 투쟁력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 항쟁이 반민중적 소수 정치군인집단이 미국행정부 등을 업고 자행한 대량학살로 진압되었다는 사실이 원통할 뿐이다. 이러한 대량학살은 소수 정치군인의 반역사적 반민중적 만행이고 미행정부의 이기주의적 본성을 드러낸 야수와 같은 작태로서 한민족 전체가 일어나서 규탄해야만 할 사실이다.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타협주의는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보신책은 될지언정, 민족의 위기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째, 개원협상의 결렬이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 최종 협상 전 민정당의 결렬선언이래

지, 신민당과 민정당 모두 협상결렬에 대한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점 등이 그러한 의문을 더욱 부채질한다.

### II. 신민당이 걸어야 할 정치의 태도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의 위기를 물고 온 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단하는 일이다. 동족살인이라는 민족 자체를 부정한 작태를 저지른 군사독재집단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민족의 자주 통일도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소수 군인집단이 자행한 광주시민학살을 규명하는 것이 전민중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바람을 구현하는 길이다.

막대한 물력과 어마어마한 물리력을 총·칼로 장악하고 있으며, 기층민중의 착취권을 담보로 하여 지지를 약속하고 있는 미행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현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신민당은 기층민중을 바탕으로 한 전민중의 위대한 투쟁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지지는 신민당이 기층민중의 편에 서서 전민중의 바람을 실천에 옮길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민중이 신민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정치일선에 나선 것 자체가 모험이다. 이 모험을 자처하여 떠맡은 신민당은 정치의 태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정치의 태도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를 어느 측면에 맞추어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치노선을 확립하고, 이 정치노선을 유연하게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올바른 정치노선을 실천하지 못하고 기회만을 엿본다면, 신민당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고, 또 다시 총·칼이 자행할지도 모르는 썩쓰리 작전에 속취양이 될 것이다.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은 시기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5월이 되면 누구나 가슴이 메워진다. 그 이유는 아직도 망월동에는 2천여 광주시민의 영혼이 두 눈을 감지 못하고 방황하며 동족살인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진상규명에 앞장서야만 전민중은 신민당이 민중의 편으로 민족의 한을 풀어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5월을 그냥 넘겨 정치의 태도를 유보하거나 회피한다면 신민당의 보수정치인들은 군사독재집단의 획책에 의해 이윤배반적인 보수정객으로 변신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점을 두 눈을 감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과 함께 주시할 뿐만 아니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이 전체의 50%를 넘고, 종업원의 다수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족되는 생계비보충과 부채 상환을 위해 장시간의 연장근로 및 특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근로자의 합성), 대우자동차 노조정상화 추진위,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 81~84년까지 4년동안 제조업체 평균인상율의 절반수준에서 임금인상이나 결되어 왔고, 동종 업체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물질관리수당 등은 일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우노동자들은 금년 3월부터 자체교육을 실시하며 회사측의 허구와 협박을 폭로하고 과감한 임금인상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그 요구와 주장은

1. 회사측은 18.7% 임금인상을 즉각 실시하라
2. 회사측은 제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즉각 실시하라.
3. 노조집행부는 어용성을 탈피하고 끝까지 투쟁하라 등이다. 결국 대우노동자들은 4월 24일 회사측과 임금인상에 대해 농성을 들었으나 이번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 기본급 8% 인상 ▲ 수당신설 4.1% ▲ 호봉인상분 4% ▲ 생산장려금 50% 지급 등을 합 의하고 주변 파급효과가 큰 대공장에서의 최저임금 확보 투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 평가는 차후로 미룬다.
5. 임금투쟁의 전망

임금투쟁은 협의의 근로조건 개선투쟁이며 현단계에서는 생존권투쟁이고 나아가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 확보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임금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제일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임금투쟁은 전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군사독재체제의 법적·물리적 탄압망에 걸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몇가지 과제를 해결해내야 한다. 즉, 상당한 정도의 단결력, 교육·홍보를 통한 보편적 대중성 획득과 일체감 확보, 내적 외적 연대가능성 검토, 주변적 시기적 여건 이용 등의 문제이다.

몇단계를 거쳐 노동운동은 일정한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특히 임금인상투쟁은 더욱 고양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인지방의 임금인상투쟁 사례들은 경향각지에 파급되어 노동자들을 고무시켰으며 여기에 조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보편화되고 다중화된 임금인상투쟁은 곧 군사독재체제의 핵심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므로 추가적 탄압대응도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단합된 힘이 노동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이며 이와 함께 내적·외적연대,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효과적지원으로서 저들의 탄압을 물리치고 이투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광주학살 책임지고

## 5월 광주민중항쟁기념 시민대회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모이자! 규명하자!

### 독자투고

## 우리 모두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자

이상하던 가로수도 역사의 소명을 간직한 듯 끝내 소생하여 새 잎을 돋우고 있다. 독재에 항거하여 젊은 양심들이 뿌린 피땀마저 퇴색해버린 4월 하늘이지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정신적 유산을 받아 항상 불의와 맞서 싸우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민주청년들이 있기에, 참된 민주사회로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불굴의 투지로 발간되는 「민주화의 길」과의 만남은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경험이다. 그것은 단지 물(物)에 대한 나의 소유욕에서가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사고와 행동을 민주화의 흐름에 투척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사회현실 속에서 자칫하면 개인적인 무력감이나 사회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나 삶의 공간이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획득하는 것으로, 의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의 길」에는 변화해가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당면한 정세 분석이나 민주화운동을 평가하는 것은 민주화투쟁에 나선 청년지식인들에게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일반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제와 민주사회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적 소외를 강요당한 일반 대중들은, 각기 처해있는 생활환경과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어 당장 정치이슈에만 급급하다보면 다양한 요구를 통일적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리라 판단된다. 좀더 확대된 지면을 통해, 청년지식인들의 왕성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접했으면 한다. 그리고 경제기기도 지속적으로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고 듣는 것의 대부분이 기만과 허위의 식으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적 대화의 광장이 요구되는 바, 「민주화의 길」의 선도적 노력과 독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국민적 각성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선거이후 대중들이 만들어 놓은 잔치상에서 정치인들의 활발한 경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듯하다.

「민주」라는 소망스런 한마디 말조차 눈치를 살피야 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금방 「민주」라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 선거 유세장에서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살 땅마저 빼앗긴 한 아주머니가 반민정당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민심을 외면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이 한 마디 내뱉는 말로서 민주사회가 되었다 말인가? 구악이 신악으로, 구독재가 신독재로 바뀔 것인가? 민중을 소외시키는 어떠한 정치세력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솟아오르는 대중의 열기로 위기에 처한 군사독재정권이 또 다시 민중을 배반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아무튼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우리 청년들, 민주화세력은, 정치무대 뒤에 가려져 있는 독재정권의 기만적 술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참된 현실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주체의식을 잃지 않고 유연성있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현실 상황에 대한 일면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중의 힘을 부각시키는데 범민주세력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해도, 망월동묘지가 어둠 속에 묻힌다 해도, 5월은 온다. 오월! 민중을 배반하여 이 땅에 군사독재가 들어섰고, 그 가장 잔악한 수법으로 수천명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은 군사독재의 민중배반의 달이다.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인가? 그날의 민중의 표상이 바로 억압받는 지금 민중의 모습과 닮아나이다. 그날의 총칼이 닮아나인 독재 권력의 웃음 뒤에 감춰진 비수다. 지난 5년간 이 땅의 민주양심세력들은 그 얼마나 많은 울분과 피땀 한을 달래 왔던가? 이제, 아직도 책임질 줄 모르는 군사독재권력 앞에 과감히 나서, 민주주의의 가면을 벗기고, 유죄선고를 내려야 할 때다. 국민 모두의 가슴에 5월의 민족혼을 심어,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 폭력성, 경제적 착취와 억압을 폭로 척결하고 우리들 하나하나의 의식과 투지가 민주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맙시다.

— 봉천동에서 회사원K씨